



2019년, 희망과 두려움이 공존한 한 해

안갯속
북미 정상회담과
불안한 동아시아

4면

중국과 세계의
경제침체

5, 7, 8면

2019년,
희망과 두려움이
공존한 한 해

6, 7, 9, 10면

홍콩 항쟁

9면

톨게이트

직접고용 성취하길

11 면

문재인 정부의
노동자 공격, 이주자 공격

11~12면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변화·미세먼지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려면 새 사회가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관을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변화, 미세먼지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 자결에 반해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모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자기결정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억류 상태에서 풀려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에서 살 권리를 위해 투쟁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이 법은 '북한의 위협'과는 큰 관계가 없고 오히려 남한 내 정치적 반대를 잠재우기 위한 마녀사냥용으로 권력층이 종종 사용하는 무기이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혁명적 조직은 노동조합 운동으로부터 생겨나 세워질 수 없고, 오히려 자본주의에 혁명적으로 반대하는 소수(노동자뿐 아니라 청년·학생도 포함됨)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들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이라는 수단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점검하고,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구되면 우리와 함께 합시다.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직접고용도, 처우개선도 없는 빈 껍데기

양효영

12월 6일 고용노동부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올해 2월 27일 정부는 사실상 민간위탁 노동자 정규직화는 포기하면서, 그 대신 상반기 중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고용 승계, 합리적 임금 수준 등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연말이 되어서야 뒤늦게 발표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가이드라인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도 직접고용 방안은 없었다. 게다가 약속한 적정 임금 수준도 제시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또다시 민간위탁 업무의 다양성, 복잡성 때문에 일률적 기준을 낼 수 없었다며 변명했다. 그러고는 적

정 임금 수준을 제시하기 위해 2020년에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임기 말까지 조사만 하겠다는 것이다. 20만 명에 달하는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처우 개선 열망을 마지막까지 꺾어 버린 것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공공기관 내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설치해 가이드라인 이행 상황을 점검 하겠다. 위탁 계약을 할 때 근로조건 보호 관련 약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 계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를 명시하도록 하겠다. 임금체불과 착복을 막기 위해 노무비는 수탁기관의 전용계좌에 별도로 지급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형식적인 약속서로 노동자들의 조건이 개선될 리 만무하다. 이미 존재하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에서도 근로조건 보호 약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이행하지 않는 곳이 많다.

노무비를 따로 입금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이더라도, 경쟁적 입찰 제도 때문에 인건비 자체가 하향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위탁업체들이 사업을 따 내려면 위탁 가격을 어떻게든 낮게 써내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는 위와 같은 기초적 조치들마저 “사업의 성격상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 가능”하다는 조항을 곳곳에 덧붙여 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원래 가이드라인 초안에는 위와 같은 우려를 줄일 일부 방안이 논의 됐지만 최종 가이드라인에서는 모두 삭제됐다고 한다.

최대한 민간위탁 업체의 이윤을 건드리지 않고 정부 부담도 지지 않으려는 무책임한 가이드라인인 것이다.



또다시 사기로 드러난 정규직화 약속 20만 명에 이르는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열망도 꺾어 버렸다

신간 소개 《낮선 이웃》 이재호 지음, 이데아 출판, 328쪽, 17,000원

따뜻한 시선으로 꼼꼼히 살핀, 한국에서 난민의 삶

2018년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예멘 난민을 포함해 태국, 카슈미르, 발루치스탄, 시리아, 이집트 등 12개 국가에서 온갖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온 난민들의 이야기. 왜 난민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한국에서의 삶은 어떠한지를 생생하게 담았다. 책 제목처럼 낯설지만 우리 곁에 머문 이웃에 대한 이야기다.

저자인 이재호 《한겨레21》 기자는 2018년 예멘 난민이 제주도에 입국한 직후 제주도에서 난민들을 밀착 취재했다. 이 책은 그 후 1년 동안 한국에

서 만난 난민들의 이야기를 묶은 것이다.

저자는 난민들의 삶과 조건을 꼼꼼하게 살피며 난민이 되고 싶어서 된 이들은 없다고, 난민은 “오랫동안 켜켜이 쌓여온 분쟁과 억압으로 점철된 세계사의 일부”라고 말한다. 난민 대부분은 제3세계의 궁핍하고, 정치적으로 불안하며, 외세의 억압이 극심하거나, 오랫동안 전쟁으로 고통받은 지역에서 왔다.

저자는 ‘난민이 잠재적 성범죄자다’, ‘난민이 내국인의 일자리와 복지를 빼



앗는다’ 등 난민에 대한 온갖 ‘가짜 뉴스’도 요목조목 따져 본다.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인 배우 정우성 씨가 추천사를 썼다.

오해와 편견이 견인, 난민 문제의 실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에게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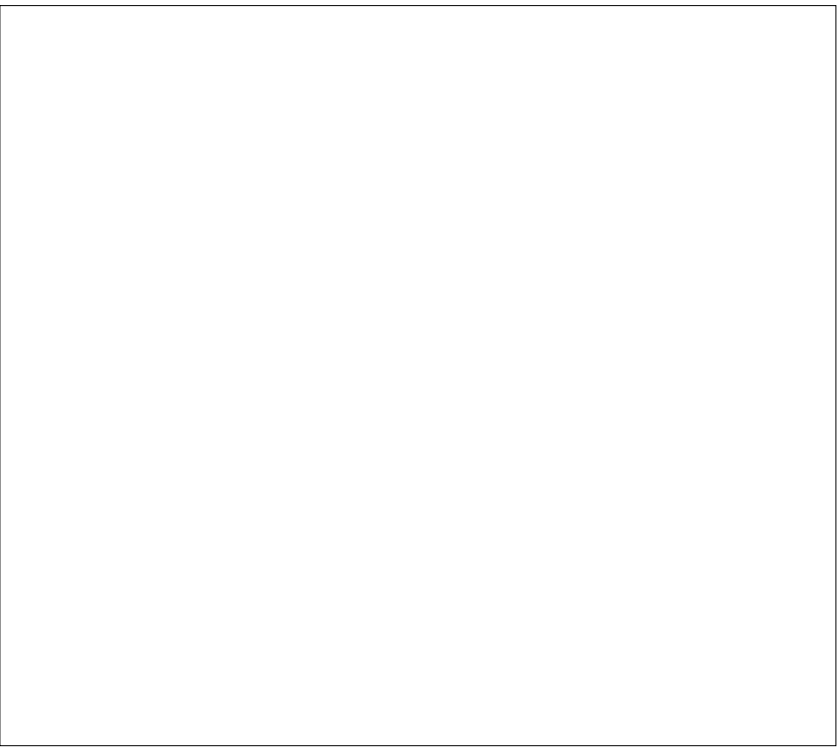
문재인의 정치 위기와 여야 갈등

여권의 부패 의혹은 꼬리를 물고, 한국당은 여전히 불신을 받는다

김문성

여야 갈등 속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은 예상대로 강하게 반발했다. 12월 11일(오늘)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들(선거법, 공수처 신설 등 검찰 관련 법안들, 유치원 3법)의 처리여부는 불투명하다. 한국당의 비난은 설득력이 없다. 통과된 안은 정부 원안과 별로 다르지 않은데, 원안 자체가 과감한 적자 예산안도 아니었고, 우파가 경기를 일으키는 복지 확대 예산도 아니었다. 오히려 최초로 50조 원을 돌파한 국방예산 규모와 증가율이 화제가 됐다. 정부는 기업 지원 예산의 증가도 부각시켰다. 한국당을 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도 복지·고용 분야 예산이 1조 원가량 줄고 기업 지원과 지역 개발(SOC) 예산이 늘었다. 그렇게 해서 늘어난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 선심성 개발 예산(총선용) 혜택에 한국당 의원들도 예외가 아니다. 올해 상반기 패스트트랙 법안 때와 달리, 한국당이 예산안 통과 때 단순히 퇴장 방식으로 표결 불참만 한 이유일 것이다. 한국당의 “세금 도둑질” 운운이 골사나운 억지 소리인 까닭이다. 한국당이 예산안을 문제 삼은 것은 예산안 자체보다는 패스트트랙 법안의 통과를 막고 저지할 명분 쌓기다. 예산안을 통과시킨 4+1(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민주평화당, 정의당 + 대안신당) 연합이 의석 과반 지위를 이용해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밀어붙일까 봐 우려하는 것이다.



국회는 복지 예산 스텔라데이지 호 수색 예산 등을 삭감하고 지역구 선심 예산은 늘렸다

검찰 개혁의 허구성 드러낸 청와대 핵심들의 부패 의혹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는 청와대 실세 정치인들의 월권 행사 의혹으로 번졌다. 조국 민정수석실이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일을 수사하던 것이 이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윤건영, 경남도지사 김경수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이어진 것이다. 유재수, 김경수, 윤건영, 전 민정비서관 백원우 등은 자신들만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국정 관련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커진 것은 그들 사이 대화 중

에 감찰 중단 논의도 있었다는 의혹 때문이다. (조국을 뺀) 이들 모두는 문재인과 함께 노무현 청와대에 함께 있었던 인연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이너 서클’(권력 실세)이 개입했다는 의혹인 셈이다. 권력 실세끼리 대화를 나눈 것 자체가 죄는 아니다. 아직 이 부패 고리가 어디까지인지 분명치 않다. 그러나 여러 현안들을 상의하는 은밀한 네트워크가 유재수 감찰 무마 건처럼 부패 비리를 보호해 주거나, 새로운 권력형 비리를 벌이거나 감싸 주는 구실을 했을

거라는 의혹은 꽤 타당하다. 이 점에서 조국과 정경심의 WFM과 상상인, 우리들병원 대출 의혹 등은 여전히 수사 대상이다. 이런 의혹들이 수사로 파헤쳐지길 바라는 것은 검찰의 부패성과 억압성에 대한 불신과는 별개 문제다. 문재인이나, 노무현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 강금실이 노무현 정부 초기에 검찰이 노무현 정부의 대선자금 수사로 성과를 내면서 검찰 개혁의 적기를 놓쳤다고 회고했을 때, 그들은 검찰 “개혁” 기치에 담긴 목적이 부패 척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이다. 자신들의 (재)집권에 유리한 여건 조성이 본질적인 목적일 것이다. 이런 모순 때문인지 몰라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미애는 말을 아끼고 있다. 추미애는 박근혜 정권에 퇴진 촛불 운동 초기에 당대표로서 문재인과 박근혜 간 거래를 중개하려 했었다. 거국 내각을 꾸리면 퇴임 이후를 보장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검찰 문제뿐 아니라 박근혜 사면과 관련해 추미애 임명이 주목되는 이유다.

여야를 막론하고 친자본주의 정치인들끼리 통하는 “여의도 문법”

한국당의 예산안 통과 비난은 억지에 가깝고 꾸민 말에 가깝다. 무엇보다 이번 심사에서 SOC 예산은 9000억 원가량 늘어났다. 여기에 의원들이 탐내는 지역구 개발 예산이 포함돼 있다. 내년이 총선이기 때문에 더 민감했을 것이다. 늘어난 지역구 개발 예산 혜택은 심사에 직접 참여한 4+1 정당들뿐 아니라 한국당 의원들

도 쏠쏠하게 챙겼다. 민주당 대표인 이해찬, 친문 실세 전해철, 민주평화당 정동영, 조배숙, 대안신당의 박지원, 유성엽 등 4+1 연합의 지도부도 각 지역구에서 혜택을 봤다. 전해철은 정부 원안에도 없던 지역구 예산을 따냈다. 한국당도 다르지 않다. 중앙당이 예산안 통과를 저주하며 결사 항전을 선회

포하던 때, 경북 구미가 지역구인 장석춘(전 한국노총 위원장)은 로봇인력 양성기관 유치 예산 약 300억 원을 따냈으며 보도자료를 뿌렸다. 혜택을 받은 한국당 의원들이 그밖에도 있다. 압권은 예결위원장 김재원일 것이다. 김재원은 “세금도둑질” 발언의 당사자이다. 그는 국회 예결위원장도 모르는 예산이 어떻게 통과될 수 있냐며,

예산안 작업에 동참한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고발하겠다고까지 엄포를 놔다. 그는 이번 예산 심사로 지역구 예산 100억 원을 추가로 챙겼다. 예산을 심사한 여권이 국회 관례와 예우, 그리고 입막음과 달래기 차원에서 챙겨 줬을 것이다. 이것이 아마도 주류 정치인들이 “여의도 정치 문법”이라고 부르는 관행일 것이다.

변모는커녕 변장도 어려운 한국당

여야 갈등이 심각하지만 경제 위기에 직면해 기업을 지원하고 노동자들이 위기의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에는 여야 간 차이가 없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중의 불신도 점점 자라나고 있다. 그래서 두 당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두고 걱정이 많다. 최근 여당에서는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젊고 개혁적인 인사들을 많이 내세워야 한다는 명분 때문이다. 조국 사태 등으로 진보층과 청년층에게서 지지를 많이 잃은 것에 대한 대응이

다. 한국당도 엄격한 공천 배제 기준을 발표했다. 11일 한국당 총선거획단은 입시, 채용, 병역, 국적에 관한 비리와 편법에 관해서는 불관용을 원칙으로 하고 편법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연루, 여성과 성 관련 혐오감 유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언행을 한 사람도 배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성범죄 전력에 관한 기준도 높였다. 조국 사태를 염두에 뒀겠지만 한국당의 변장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여전히 반한국당 정서가 광범하다. 민주당의 부패 추문에도 한국당은 반사이

익을 별로 얻지 못했다. 이는 무엇보다 광범한 반한국당 정서가 박근혜 퇴진 운동 여파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이를 알지만, 인적 구성이 그런 혁신을 어렵게 한다. 12월 9일 한국당 의원단은 비박계 심재철을 원내 대표로 뽑았지만, 그의 러닝메이트는 박근혜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친박 중의 친박 김재원이었다. 그래서 갑질과 부패의 원산지인 한국당은 변신은커녕 변장도 아직은 어렵다. 당대표는 세월호 수사 방해, 사법 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신임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

전화로 누드 사진을 검색해 보다가 들킨 인물이다. 공천 배제 기준을 발표한 총선거획단 대변인 전희경 자신이 노동자 혐오 발언 전문가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당의 공천 도덕성 기준 강화 소식을 듣고 한국당이 총선에 안 나오는 거냐고 비웃는다. 결국 촛불 운동의 여파가 경제 위기와 맞물려 아직은 공식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여권은 촛불 염원에 못 미쳐 위기를 겪고, 한국당은 촛불의 최저 기준 격인 반우파 정서의 벽에 막혀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자본주의 국회 건너뛴 노동개혁

위선적 행각으로 우파의 기반 살려주는 건 정부·여당 자신이다. 가령 검찰 관련 법안들은 개혁성도 없을 뿐 아니라, (검찰의 조국 일가 수사로 시작해 여권 핵심부로 검찰 수사가 번지면서) 정치적 동력도 많이 약화된 상태다. 청와대 인사들의 부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여권 수뇌부가 앞장서 방해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 말의 진정성을 누가 믿겠는가. 그 수사 자체가 공수처가 할 일인데도 말이다. 선거법 개정은 사실상 진보적 개선인지 확인하기 힘든 수준으로 후퇴하고 있다. 여당은 한국당의 억지 때문에 개혁이 가로막히고 있다는 이미지(총선용)만을 누리고자 하는 듯하다.

이처럼 개혁은커녕 스스로 진보 염원 대중을 속이고 뒤통수 치는 일을 반복하면서도 여권은 사용자들이 (경제 위기 대비를 위해) 바라는 노동개혁은 신속·정확하게 처리되고 있다. 12월 11일(오늘)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도록 돼 있는 50~299인 기업들에게 계도 기간 1년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회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되돌리는 법 개악을 기다리지 않고 행정부가 직접 실행한 것이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별연장근로 허용 사유에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노동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는 천재지변 같은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라 경영상 필요에 따라 노동시간 규제를 무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개악은 사용자들이 집요하게 요구한 것들이다. 최근에는 여야 당대표들 회동에서 문제인의 설득으로 노동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키자는 대강의 합의도 이뤄졌었다. 지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개악 법안들이 대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제인은 사용자들이 쌍수를 들어 환영할 김진표를 차기 국무총리 유력 후보로 꼽았다가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 임기 초부터 세월호 수사, 산재 근절, 노조 인정, 노동3권 보장, 이석기 전 의원 등 양심수 석방 등은 국회와 기성 정치권 핑계를 대며 회피하더니 사용자들의 민원(“민생”)에는 행정부가 직접 나선 것이다. 노동자들에게는 그저 ‘공감’ 제스처에 만족하라는 식이다. 행정부가 이렇게 나선 것은 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 처리가 자꾸 지연되기 때문일 것이다. 국회에서 개악 처리가 지연된다고 해서 개악 저지 투쟁에 실질적인 힘을 쏟지 않는 것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북·미 관계는 악화되고 있는가

김영익

지난 6월 30일 남·북·미 세 정상들이 판문점에서 만나고 나서, 대통령 문재인은 그 회동이 “북미 간 적대 관계 종식과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 선언”이라고 했다. 많은 진보계 지도자들도 미·중 대결로 악화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를 한국이 잘 헤쳐 나가려면 현재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북한이 거친 말을 주고받으며 연말 북·미 관계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대로 가면 2018년 이전의 한반도 긴장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12월 3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김정은을 다시 “로켓맨”이라고 불렀다. 미군은 한반도 주변에 정찰기를 연달아 띄우면서 이 비행들을 의도적으로 외부에 흘렸다.

같은 날 북한 외무성 부상은 이런 답화를 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 있다.”

트럼프가 “무력 사용”을 언급하자, 북한 당국은 고위 관료들이 잇달아 답화를 내어 반발했다. 그리고 트럼프의 “로켓맨”에는 2017년처럼 “늑다리”로 응수했다.

마침내 12월 7일 북한 당국은 서해 위성발사장(동창리)에서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시험이라고 본다.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은 북한이 크리스마스에 ICBM을 발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12월 8일 트럼프는 김정은이 적대적 방식으로 행동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정부는 12월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소집했다. 북한에 보내는 경고다.

트럼프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남·북·미 정부가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한반도를 둘러싼 기존의 지역 질서에 ‘균열’이 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일본이 ‘패싱’되고 있다고 생각해 왔다면, 이런 사태 전개는 꽤 당혹스런 일일 것이다.

현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세계적이고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한반도를 조망해야 한다.

12월 7일 미국 국방장관 마크 에스퍼는 ‘레이건 국방 포럼’ 연설에서 중동에서 위협이 증대하고 있지만 미국 군사력의 초점을 중국과 러시아로 옮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동에 과잉 집중된] 병력과 장비 등을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거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다.

중국을 견제하고자 상당한 역량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투입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이달에 들어오는 글로벌 호크 이런 전략 무기를 속속 도입하면서 북한 미사일 시험을 비난하는 건 전형적인 “내로남불”

구상은 이미 오바마 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방향이다.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가 추진한 것으로는 중국 등을 제압하는 데 불충분했다고 여겼다. 그리고 “경쟁적 세계” 속에서 중국 같은 경쟁국들의 도전에 더 단호하고 공세적으로 대응해 미국의 기존 지위를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물론 에스퍼도 인정했듯이, 중동에서 아시아·태평양으로 미국의 군사력을 전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중동에서 아예 발을 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12월 3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는 트럼프가 중동 군사 개입을 줄이겠다고 말했지만 실제 현실은 사뭇 다르다고 지적했다.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등지에서 미국은 군대를 다 빼지 못했고, 심지어 이런 핵합의를 파기하면서 불거진 갈등 때문에 중동에 군대를 증파해야 했다.

그럼에도 아시아·태평양에서 트럼프 정부의 전략적 방향은 명백히 중국을 무릎 꿇리는 데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놓으며, 일본·인도·호주 등을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거기에 한국을 비롯한 다른 동맹국들을 결합시키려 한다. 그리고 우주사령부 창설, 첨단무기 개발 등 군 전력 증강에 애쓰고 있다.

한정된 역량으로 세계 곳곳에 관여해야 하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는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책임 분담을 요구한다. 실상 ‘세계의 경찰’ 구실을 내려놓는 구걸 행위에 가깝다. 트럼프 자신이 “미국은 계속 세계의 경찰일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트럼프 정부는 인

도·태평양 전략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무역전쟁과 인도·태평양 전략에 자극받은 중국도 맞대응하고 있다. 10월 1일 건국절 열병식에서 중국은 첨단 미사일과 스텔스 전투기를 공개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경제·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이런 대응책 중 하나다.

미·일과 중·러의 제국주의적 경쟁은 한반도의 지정학을 다시 그리고 있다. 예컨대 지난 7월 동해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전략 폭격기까지 동원해 작전을 펼치고, 이에 대응해 11월에 미군 전략 폭격기가 일본 군용기와 함께 동해에서 작전을 벌였다.

“좋은 관계”?

이처럼 한반도 주변에서 열강 간의 갈등과 경쟁이 점증하는 것은 남·북한에도 상당한 압력을 준다.

6월에 트럼프와 김정은은 판문점에서 만나 화기에애한 모습을 보였지만, 회동 후 바로 양측 간에 불협화음이 불거졌다. 대화 재개부터 쉽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가 대북 제재 해제 없이 비핵화의 구체적 조치 이행을 북한에 요구하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아서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실무 회담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트럼프 정부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대화”를 강조했지만, 실제 대화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 와중에 미국의 고강도 대북 제재는 유지됐고, 한미연합훈련도 야금야금 진행됐다. 결국 말로만 “좋은 관계”였을 뿐이다.

북한 김정은 정부는 북·미 관계에

좌절하고 초조해 하는 듯하다. 11월 22일 북한 외무성 제1부상 최선희는 미국에게 받은 것은 “배신감뿐이다”라고 한국 기자들에게 말했다. 김정은 정부는 트럼프가 국내 정치적 필요 때문에 북·미 대화를 이용했을 뿐이라고 불만을 터뜨려 왔다.

북한 정부는 트럼프 정부에게 북·미 대화에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 올 연말을 그 시한으로 제시해 왔다. 그리고 그 “연말”이 다 돼 가고 있다.

〈한겨레〉, 〈경향신문〉 같은 개혁파 주류 언론들은 현재 미국과 북한이 “강대강” 대치를 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서 북한이 먼저 ‘중대한 시험’으로 행동한 것이 기껏 일군 대화 분위기를 망친 께잡한 일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경쟁을 중심으로 점증하는 긴장, 치열한 군비 경쟁 상황 등 한반도 주변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와 대북 제재 유지가 북·미 관계를 다시 악화시킨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산 첨단 무기를 꾸준히 도입하는 것도 북한을 자극한다. F-35 전투기에 이어 첨단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도 이번 달에 들어온다. 한국의 주류 언론들은 북한의 서해 위성발사장 활동 재개가 남북 합의 위반이라고 성토했지만, 한국의 군비 증강이 남북 합의상의 ‘군축’에 어긋난다는 점은 말하지 않는다. 한·미·일 동맹이 여전히 굳건한 가운데 가해진 대북 압박을 봐야 한다. 그러면 북한의 잇단 방사포 발사와 서해 해안포 사격의 이유를 알 수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보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행태가 훨씬 더 한반도 평

화를 위협하는, 진정한 문제다.

장기적 추세

물론 지금 당장 “화염과 분노” 같은 말이 나온 2017년 하반기 같은 상황이 재현될 것이라고 단정지를 수는 없다. 북·미 관계를 돌아보면, 서로 으르렁거리던 양측이 극적으로 대화를 시작하고 곧이어 교착 상태에 빠지곤 했다. 그래서 대화는 긴장과 적대가 새롭게 쌓이는 시작이 된 경우가 많았다. 일부 사람들은 그간 외교적 치적으로 북·미 대화를 꼽아 온 트럼프를 “[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책임질 유일한 주체”로 보고 그에게 일말의 기대를 걸 수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와 그의 지지 기반은 미국 제국주의의 이해관계를 나름의 방법으로 지키려는 정치 세력이다. 트럼프의 과장된 언변과 정상회담이라는 형식 외에 북·미 관계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여태껏 거의 없는 까닭이다. 냉정하게 보면, 조지 W 부시 정부 하에서 나온 북·미 간 합의들이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에서 더 나은 것처럼 보일 정도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의 장기적 추세는 모호함 속에서도 좀 더 위험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어느 순간에는 다시 상황이 악화하는 쪽으로 급변할 수도 있다. 이 와중에 다시 북·미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한반도 상황을 획기적으로 바꿀 만큼 진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중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 트럼프, 문재인 등에게 걸린 불필요한 기대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 제국주의 경쟁의 현실과 그 경쟁이 초래하고 있는 긴장과 갈등, 모순을 경고해야 한다.

침체 조짐을 보이는 중국 경제

이정구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객원교수

최근 중국 경제가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계속 하락해 2020년에는 6퍼센트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1989년 톈안먼 항쟁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면 일자리가 감소하고, 생산이 둔화하는 등 사회 전반에서 악영향이 나타난다.

중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라 할 수 수출도 올 11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했다. 특히 11월 대비 수출은 23퍼센트 급락해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을 실감할 수 있었다. 중국 경제의 거시 지표들(GDP, 투자, 무역)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침체가 예상된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11월 25일 발표한 ‘2019 금융안정보고서’는 가계부채의 급증과 기업 파산으로 인한뱅크런을 이상 징후로 지목했다.

중국의 가계부채는 2018년 말 GDP의 60.4퍼센트에 이르렀다.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2018년 93.4퍼센트에서 올해 99.9퍼센트로 크게 올랐다. 신용평가기관 피치는 2019년 상반기 신용카드 미수금 잔액이 7.23조 위안(약 1226조 원, GDP의 7.8퍼센트)이라고 추정했다. 하지만 가처분소득은 가계부채 증가만큼 늘지 않고 있다.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가계는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소비 지출을 더 줄여야 할 것이다.

2019년 3월 중국 정부는 소비 안정을 위해 2조 위안(약 339조 원)의 세금 감면을 해 줬다. 하지만 높은 가계부채 때문에 세금 감면이 가계 소비 증가로 이어질 것 같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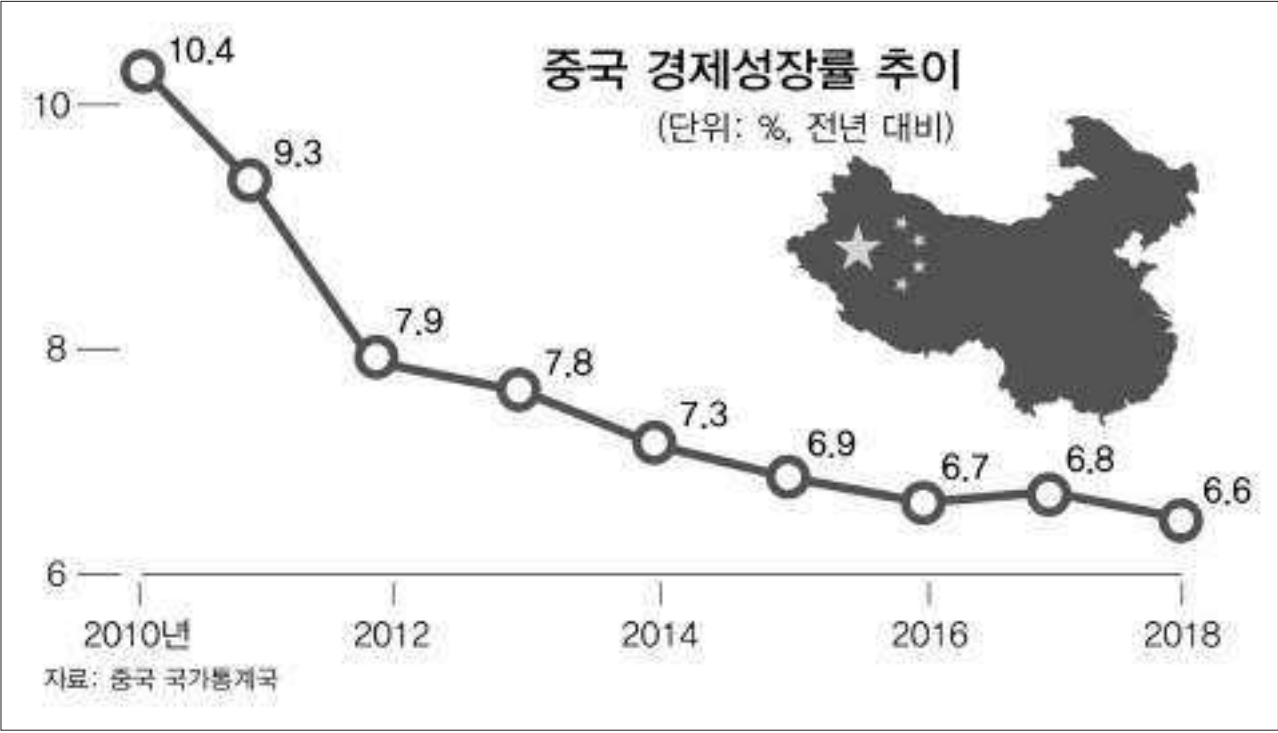
지난 10월 소매판매지수 증가율은 지난해보다 7.2퍼센트가 늘어나는 데 그쳐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10월에 자동차 판매가 4퍼센트 감소하면서 소매판매지수를 가장 많이 끌어내렸다.

게다가 이런 소비 위축은 중국 경제가 지닌 더 심각한 문제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기업 파산과 금융 불안

2019년 중국 기업들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규모도 심상치 않다. <블룸버그>는 중국에서 지난 11월 이후 최소 기업 15곳이 추가로 파산해, 연간 디폴트 금액이 1204억 위안(약 20조 원)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연간 기준 사상 최고였던 지난해의 1219억 위안에 근접한 수치다. 기업 파산 우려는 부동산, 철강, 신에너지, 소프트웨어 등 전(全) 산업에 걸쳐 광범하게 확산하고 있다.

물론 중국 전체 채권시장 규모인 4조 4000억 달러(5250조 원)에 견주면 현재 디폴트 규모는 0.4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자금 경색은 순식간에 도미노처럼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디폴트 규모로만 안정성을 판단하기에는 이른다. 신용평가기관 피치의



애널리스트 왕잉은 “중국 당국이 모든 기업을 살리려는 힘들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선별 규제 조치 때문에 더 많은 기업이 파산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기업 파산의 증가는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전국 은행 4400곳 중 무려 586곳이 고위험 상태라고 진단했다. 중국 정부도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회사채 규모가 165퍼센트로 불어난 이후 부채가 많은 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기업들의 디폴트가 많아지는 이유는

결국 수익성 하락 때문이다.

올해 초 중국 국가통계국이 2018년 중국 제조업의 이익 현황을 보면, 연간 2000만 위안(약 33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린 제조업 기업들의 2018년 순이익 규모는 2017년보다 10.3퍼센트 증가했지만, 순이익율은 2017년(21퍼센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특히 외자기업의 이익 증가율은 2017년(15.8퍼센트)보다 대폭 떨어진 1.9퍼센트였다. 국유기업의 이익 증가율도 45퍼센트에서 12.6퍼센트로 하락했다.

최근에는 순수익 자체도 하락하

고 있다. 2019년 10월 기업 순이익은 4275억 6000만 위안(약 72조 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9퍼센트 줄었다. 2011년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지난 8월(-2.0퍼센트)과 9월(-5.3퍼센트)에 이어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이다. 주홍 국가통계국 수석 통계사는 “공산품 생산가격의 하락, 생산과 판매의 성장 둔화 등에 따른 것”이라며 “경기 하방 압력이 크고 불확실성 또한 크다”고 밝혔다.

세계경제의 침체와 미중 무역전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국 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땅값 폭등시키며 가계부채 위험 키운 문재인 정부

정선영

얼마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들어(2017~2018년) 땅값이 2054조 원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의 70퍼센트는 땅이 한 평도 없는 반면, 상위 1퍼센트는 지난 2년간 땅값 상승분만 780조 원을 차지했다. 불평등과 함께 집 없는 사람들의 설움은 더욱 커진 것이다.

그런데 국토부는 경실련의 발표에 대해 땅값이 “1076조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반박했다. 토론회도 하자고 했다. 경실련 측은 이에 즉각 응화했다고 했지만 국토부는 토론회 날짜를 내년으로 미루며 김을 빼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논란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경실련은 공시지가가 실제 시세의 42퍼센트에 불과하다고 추산했지만, 정부는 64.8퍼센트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64.8퍼센트라는 근거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경실련이 요구한 공동주택 시세반영률 세부 내역 공개도 거부했고, 지난 10월 정동영 의원이 요구한 공시지가와 공

시가격 시세반영률과 산출 근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애초에 이런 논란 자체가 땅값과 집값을 불투명하게 산정해 온 정부 정책에서 비롯했다. 정부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지표로 공시지가와 건물의 공시가격을 산정해 왔다. 그러나 이는 실제 거래 가격보다 턱없이 낮게 책정돼, 사실상 땅 부자, 집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 주는 꼴수였다.

실제 경실련 조사를 보면, 서울과 경기도 아파트의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33.4퍼센트, 31.8퍼센트에 불과하다.

게다가 설사 국토부의 기준으로 하더라도 연간 땅값 상승률은 박근혜 정부 때의 갑절이나 된다. “거시경제의 큰 흐름에서 보면 많은 수준이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많은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다. 올해 10월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은 무려 8억 7525만 원에 이른다. 2017년 5월 이후로 44퍼센트나 올랐다. 전체의 딱 중간만큼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30년 넘게 한 톨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돈이다.

이러니 “부동산 문제 자신 있다”고 한 문재인인의 말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지난 4년간 3억 5000만 원이 오른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부동산 투기를 통한 경기 부양

이처럼 땅값이 폭등한 이유는 정부가 노동자와 서민들의 주택난 해결보다 기업들을 위해 경기 부양을 우선시해 왔기 때문이다.

한국의 수출은 12개월째 감소하고 있고, 기업들의 수익성은 악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 침체를 막으려고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하했고, 이는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그야말로 솜방망이었을 뿐이다.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를 전국의 단 27개 동에만 적용하는 ‘핀셋 규제’가 이를 잘 보여 줬다.

반면 경기 부양을 위한 건설투자 확대는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2.9퍼센트나 늘었다. 이미 집값 안정에는 효과가 없음이 드러난 신도시 건설도 추가로(3기) 진행하고 있다. 건설투자 과정에는 항상 부패가 따라다닌다는 점도 향후 유의해서 봐야 할 것이다.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면 값싼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려야 하지만, 이런 계획은 찾아보기 힘들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의 주거 문제 관련 공약 이행률은 임기 절반이 되도록 6.3퍼센트에 불과하다.

반면 주택 임대사업자들에게는 대출을 확대하고 세금을 감면하는 등 혜택을

을 줬다. 이 때문에 주택을 이용한 투기는 더욱 활성화됐다. 결국 이 정부에서도 “빛 내서 집 사라”는 정책이 계속된 것이다.

이 때문에 가계부채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과 전세보증금까지 합친 한국의 전체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29퍼센트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가계대출 증가율도 지난 4년간(2015~2018년) 8.4퍼센트나 돼,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이다.(서영수, 《대한민국 가계부채 보고서》, 에이지21)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하며 전세를 끼고 빛 내서 투기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에서, 만약 집값이 떨어질 경우 부채 문제가 급격하게 터지며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

부채 문제가 터지기 전에도 가계부채 증가는 이자 부담 증가 등으로 가계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며 경제를 더욱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올해 홍콩에서 저항이 급격히 터져 나온 배경에는 심각한 주택난과 같은 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있었다. 거품과 불평등을 키우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경제적·정치적 위기 모두를 심화시키는 뇌관이 될 것이다.

2019년을 돌아본다

희망과 두려움이 모두 엄습하다

2019년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무자비한 국가 폭력에도 대중이 엄청난 자신감으로 저항에 나선 경우를 여럿 목격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파들이 세력을 키우려 하는 시도도 있었다. 영국의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편집자 **샬리 캠벨**이 올 한 해를 돌아본다.

“우리는 정상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그 정상 상태가 문제였기 때문이다.” 올해 홍콩과 칠레 산티아고에서 발견된 이 그래피티는 현 시기의 특징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정상 상태’는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뿔했다. 전 세계 노동계급과 가난한 사람들이 경제 위기의 책임을 떠안아야 했던 탓이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긴축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정치적 불안정성이 보편화되고 정치 기록관중이 쇠퇴하는 일들이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은 뜻밖의 사건들을 불러일으켰다.

세계 곳곳에서 분출하고 있는 반란의 물결이 한 표현이다. 몇 곳의 예를 들면, 올해 수단과 알제리에서는 정치 권력자를 쫓아내는 반란이, 칠레와 홍콩에서는 청년층을 필두로 거대한 운동이, 기니와 카탈루냐에서는 수백만 규모의 강력한 항의 시위가 일어났다. 프랑스에서는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유류세 인상과 연금 삭감 시도에 맞서 시작된 노란 조끼 운동이 한 해 동안

저항을 계속하고 있다.

그레타 툰베리에 영감을 받고 멸종 반란 운동으로 크게 성장한 학생들의 운동 덕분에 기후위기 문제가 마침내 제대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기후 위기 저항 운동은 지난 몇 년을 통틀어 영국에서 가장 흥분되는 시위가 됐다. 특히 전국의 크고 작은 도시들에서 학생을 수만 명이 참가하고 노동자들도 가세한 9월 20일 기후 파업, [4월] 부활절 주간과 가을에 런던 중심부를 점거해 마비시킨 국제적 ‘멸종 반란’ 운동도 굉장하 큰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모든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간 것은 아니다. 스페인에서는 “공식 정치” 내 좌파[사회당과 포데모스]의 지지가 줄었고, 극우 정당 ‘보스(VOX)’가 의석을 얻었다.

다음은?

볼리비아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 등 15년 전 라틴아메리카를 휩쓸었던 ‘핑크 물결’이 상징한 [진정한 변화에 대한] 대중의 기대는 상당 부분 이뤄지지 않았다. 그 탓에 이들은 우파가 재개한 공격에 취약했다.

여기에 우리가 여전히 트럼프의 세계에서 살고 있고, ‘영국의 트럼프’ [보수당 대표] 보리스 존슨이 의회의 과반을 차지하려고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2019년을 돌아보면 오늘날 정치가 뚜렷하게 두 편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

을 볼 수 있다. 한 쪽은 은행들과 억만장자들의 이익을 수호하고 대변하고자 하는 트럼프, 존슨, [브라질 대통령] 보우소나루, 볼리비아의 [쿠데타 이후 임시 대통령] 헤아니네 아녜스 같은 자들이다. 다른 한 쪽은 대안에 대한 열망을 대변하는 수단·알제리·레바논의 대중, 그레타 툰베리, 제러미 코빈, 기후 파업 참가자들 등이다.

이 세계를 움직이는 자들이 누군지 찬찬히 살펴보면 선출된 정치인들이나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아녜스 같은 자들이 실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출된 적 없는 억만장자들이 소유·운영하는 기업들은 세계 자본주의의 중핵을 이루는 까닭에 정부들은 그들의 이익을 따르라는 압력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기후 위기, 모랄레스의 몰락, 교육 상태에 빠진 브렉시트, 그리스 시리아 정부가 유럽연합(EU)에 맞서지 못한 실패가 설명된다.

즉, 우리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 지지 입장을 취할 때조차 선거 그 자체만으로는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다가오는 2020년대에 우리가 더 잘 조직돼 있고, 기층 활동가들의 조직망이 더 촘촘해 갖춰지고, 파업이 더 많아 질수록 다가올 전투들에 더 잘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019년 12월호 번역 한수진



세계경제 침체 위험이 커지다

저항을 건설해야 할 때

샬리 캠버 영국 반자본주의 신문 〈소셜리스트 리뷰〉 편집자

지난주 독일 경제 소식에 유럽 전역의 기업주들이 오작해 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독일 산업 제조업 부문이 10년 중 가장 가파르게 후퇴하고 있다. 2019년 10월 독일 산업 생산은 전년도 통틀어 대비 5.3퍼센트 감소했다.

10월에 제조업 주문량이 급감했다는 통계가 발표된 직후 들려온 소식이 다. 제조업 기업 대부분이 11월에는 경기가 더 추축할 것이라 전망했다.

영국 친기업 언론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지적했다. “이반에 발표된 수치는 최근 2년간의 독일 제조업 하향세가 끝을 모르고 계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유럽연합 경제 성장의 엔진이어야 할 독일 경제가 정발로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서비스 부문이 여전히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 경제 전체가 후퇴하는 것은 아직 아니다. 그러나 몇몇 부문은 이미 벼랑 끝에 있다.

83만 명을 직접 고용하는 독일 자동차 산업은 명백히 심각한 상황이다. 독일 자동차 생산량은 2019년 9~10월 사이에 5.6퍼센트 줄었다. 전년 대비 14.4퍼센트 감소한 것이다.

독일 기업주들은 — 영국·미국 기업주들과 꼭 마찬가지로 — 노동자들이 대가를 치르게 하려 한다.

11월 26일 독일 자동차 기업 아우디는 향후 5년 동안 9500명을 해고하겠다고 발표했다. 여섯 명 중 한 명을 자르겠다는 것이다. 폭스바겐은 지난 3년 동안 일자리 3만 개를 없애는 동

시에 생산성을 25퍼센트 높였다.

자동차 부품 기업 콘티넨탈은 향후 일자리 2만 개를 없앨 계획을 발표했고, 자동차 부품 기업 보쉬는 2019년 한 해에만 2500명을 해고했고 2022년까지 3000명을 더 해고할 계획이다.

위기

제조업 위기는 세계적이다. 영국, 호주, 브라질, 캐나다, 칠레,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포르투갈, 남한, 터키, 미국에서 제조업 생산량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설상가상으로 미·중 간 무역 분쟁과 ‘기술 전쟁’ 격화로 세계 무역 성장률이 박살났다.

12월 8일 중국 시진핑 정부는 3년 안에 정부 기관과 공공시설에서 수입 컴퓨터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중국산으로 대체하라고 지시했다. 이 조처는 HP, 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 기업에 막대한 타격이었다.

세계 금융 위기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여러 나라가 경제 침체에 빠지기 직전이다. 그나마 성장하는 곳도 성장세가 부진하다. 거기서 맺은 열매는 사회에서 가장 부유한 자들이 거의 다 싹쓸이한다.

다 다시 세계경제가 후퇴하면 모든 정치적·사회적 긴장이 격화될 것이다. 갈등이 폭발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일 것이다.

고통이 심해지면 인종차별주의와 좌파시스트들이 이주민, 무슬림, 흑인을 희생양 삼는 데에 열을 올릴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게다가 2008년 위기 당시보다 세력 기반을 훨씬 키운

상태에서 그럴 것이다.

그러나 좌파가 담대하게 대응할 기회도 있다. 프랑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항쟁이 영국 등 다른 많은 나라에서 재현될 수 있다.

몇몇 프랑스 노동조합들은 경제 위기 때 기업주들이 받은 구제를 공공연히 비판했다. 한 노동조합은 이렇게 말했다. “2008년에 은행을 구제하는 데에는 4000억 유로를 퍼부었다. 연금 개혁 철회하라!”

경기가 몇 달 안에 침체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침체가 일단 오면 어정쩡한 조처로는 위기를 전혀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선거에서 어떤 정부가 선출되든 그 정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윤을 회복하는 데에 혈안이 된 기업주들이 그 은 엄격한 한계에 직면할 것이다.

자본가들과 정권 대결하지 않으면 노동계급 대중의 삶을 방어할 수 없을 것이다.

몇몇 공공시설뿐 아니라 은행, 연금, 모든 부문의 대기업들을 [물수혜] 민주적으로 지배하는 공적 소유로 돌려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일자리와 생활 수준을 지키거나 기후 변화를 저지할 수 없을 것이다. 민간 기업들이 대부분의 투자를 지배하고, 그들은 이윤이 나지 않는 데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영국 총선에 출마한 주요 정당들 중에 이런 공약을 내건 곳은 없다. 그런 대안은 아래로부터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684호 / 번역 김준효

볼리비아 모랄레스 망명

쿠데타에 맞선 대중 저항을 위한 교훈

앤디 브라운 (배내수출 위키 왜 발생했고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채길미) 관리자

라틴아메리카 최초의 원주민 출신 대통령이었던 에보 모랄레스는 현재 멕시코에 망명 중이다. 볼리비아 군 장성들과 경찰들, 우파 정치인들이 모랄레스를 축출했다. 이들은 모랄레스가 10월 대선에서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며 모랄레스 퇴진 운동을 벌였다.

이것은 쿠데타다. 주로 볼리비아 동부에 기반을 둔 반동적 대자본가들, 미주기구(OAS), 트럼프 정부가 쿠데타를 지원했다. 트럼프 정부는 라틴아메리카 우파를 지원하고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재확립하는 데에 혈안이 돼 있다.

미국이 모랄레스 축출 과정에 개입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자들은 이 문제에서 어떠한 혼란도 있어서는 안 된다. 사회주의자

라면 제국주의에 반대하고, 미국이 라틴아메리카에 간섭할 때마다 그랬듯이 이번 미국의 간섭에도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 또한 라틴아메리카의 부를 수탈하고 라틴아메리카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해 이윤을 얻으려는 다국적 기업들에 반대해야 한다.

볼리비아 자본주의

그러나 일각에서 간과하는, 중요하고 분명하게 덧붙여야 할 점도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영향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우리는 볼리비아에도 강력한 지배계급이 존재하고 (제국주의자들과 긴밀히 연결됐지만) 그들 고유의 중요한 자본주의적 이해관계가 이번엔 작아 혈안이 돼 있다.

그 핵심에는 볼리비아 동부의 발달 모양 저지대 ‘메디아 루나반달’에 — 개중에도 특히 산타 크루즈시(市)에 — 기반을 둔 자본가들이 있다. 그들의 이

윤은 주로 대두 재배와 소 목축에 기반한 농·축산업, 석유·마약에서 나온다. 이들은 모랄레스 집권이 내내 정부에 격렬히 반대해 왔는데, 볼리비아에서 분리 독립하겠다고 협박하고 사회불안을 조장하고 우익 경제 집단을 이용해 좌파적 원주민 운동 단체와 시위를 공격하기 일쑤였다.

여기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뿐 아니라, 인구의 다수인 볼리비아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극심한 인종차별도 깔려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에서 인종과 계급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라틴아메리카 지배계급은 대체로 노동계급보다 백인 비중이 훨씬 높고, 이들의 계급 정치에는 노골적인 인종차별이 자리잡았다.

볼리비아에서는 스페인 식민 점령 초기부터 원주민에 대한 체계적 차별이 존재했고 독립 후 건설된 볼리비아 공화국에도 이런 차별이 뿌리 깊게 자

라잡고 있다. 이에 맞서, 볼리비아 노동자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원주민 정체성을 착취와 차별에 맞선 저항의 핵심 요소라고 여긴다.

2005년 모랄레스가 대통령에 당선한 것, 모랄레스 정부가 볼리비아를 다인종 국가로 선언한 것이 역사적으로 의미가 큰 까닭이다. 볼리비아 지배계급이 모랄레스를 반대하는 이유 중에는 [백인들의 인종적 우월성을 확고히 하고, 주민 다수를 차지하는 원주민을 ‘제 분수에 맞은’ 지위로 되돌려 놓기 위함도 있다.

하지만 아직도 더 말해야 할 것이 남아 있다. 자본가들이 모랄레스에 반대하는 것과 별개로, 몇몇 노동계급·원주민 부문도 모랄레스에 반대해 [싸워] 왔다. 볼리비아 농총(COB), 광원노조, 원주민 운동 연대체인 볼리비아원주민 제 분수에 맞은 지위로 되돌려 놓기 위함도 있다. 볼리비아에서는 스페인 식민 점령 초기부터 원주민에 대한 체계적 차별이 존재했고 독립 후 건설된 볼리비아 공화국에도 이런 차별이 뿌리 깊게 자

단체 등이 모랄레스와 충돌해 왔다.

노동계급 사이에서 모랄레스에 대한 열광적 분위기와 정치적 지지는 줄어들어 왔다. 모랄레스 집권이 내내 정부에 기회의 생겼고, 또 모랄레스가 망명하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 우리는 이런 진실을 직시해야 하고 모랄레스 자신과 여당 사회주의운동당(MAS)뿐 아니라 2000년 이래 라틴아메리카를 휩쓸었던 좌파적 정부들(소위 ‘핑크 물결’)의 행적을 비판적으로 돌아봐야 한다.

무비판적 지지

전 세계 많은 좌파들이 모랄레스 정부를 21세기 사회주의의 혁명적 모범이라고 주장하며 무비판적으로 지지했다. 그러나 모랄레스 정부는 그런 모범 사례가 아니었다. 모랄레스 정부는 개혁주의 정부였으며 근본적으로는 경제협회(CIDOB), ‘무헤레스 크레안도(창조하는 여성들)’ 같은 영향력 있는 여성

급적 선택을 했다.

2000년 코차밤바주(州) 물 사유화를 취소시킨 운동, 원주민들의 코카 재배권과 경작권을 지키기 위한 운동, 천연가스를 다국적기업의 손에 넘기는 것을 중단시키고 국유화를 요구한 운동, 2003년·2005년 2차러나 정부를 퇴진시킨 투쟁 등 일련의 사회운동들이 있었다. 그런 운동들은 분명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뿐 아니라 볼리비아 자본주의 국가 자체에도 도전했다.

모랄레스는 코차밤바의 코카 재배농들의 지도자로서 운동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지만, 2005년 항쟁 당시 주로 기존 질서와 항쟁 사이의 조정자 구실을 했다.

모랄레스의 측근이자 이데올로그였던 알바로 가르시아 리베라는 대중운동의 요구와 국내외 자본 사이의 중재자 구실을 할 정부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2005년에] 대중운동으로 정부

가 붕괴한 후 대선 실시 방안이 제기되자, 모랄레스와 사회주의운동당은 이에 열렬히 호응했다. 그리고 대중운동이 혁명적 요구들에 근거한 대중적 권위기 시기에 다른 모든 나라 정부들과 똑같은 경제적 압력을 받고 똑같은 계

바꾸게 했다.

2005년 12월 모랄레스가 대통령에, 가르시아 리베라가 부통령에 당선됐다. 모랄레스 정부는 “사회운동들의 정부”를 자처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대중운동의 유명 지도자들과 활동가들은 국가 기구에 편입돼 대중에 기반한 활동에서 멀어졌으며, 운동의 독자성과 역동성이 줄었다.

모랄레스 정부와 볼리비아 동부 자본가들 사이의 지난한 전투는 2006~2009년까지 이어졌다. 결국 자본가들의 이해관계를 보장하는 일련의 경제적·정치적 합의가 맺어졌다. 심지어 그 합의 중 일부는 노동자·원주민들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기도 했다. 당시의 합의들이 이제 모랄레스에 부담감이 돼 돌아오고 있다.

3선 개헌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는데도 모랄레스는 이를 무시했다. 모랄레스 집권의 뿌리가 됐던 [사회운동의] 직접·참여 민주주의에서 한 발 더 멀어진 것이다.

이것이 10월 대선을 둘러싼 논란의 배경이다. 우파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부정 행위가 저질러졌다고 믿었다. 당시 개표가 중간에 수상책계 지연됐

다가 한참 후 결선 투표가 필요 없을 만큼 모랄레스가 이겼다고 발표한 것이다.

성장 모델

경제적 측면에서 모랄레스는 국내외 자본의 권력에 근본적으로 도전하지 않았다. 모랄레스는 볼리비아와 다국적 기업들 사이의 교역 조건을 재협상했는데, 관세와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고 정부 통제를 늘렸지만 [민간 기업들] 국유화하지는 않았고 자산 몰수는 당연히 없었다.

집권 초기에 모랄레스 정부는 다른 ‘핑크 물결’ 정부들처럼 원자재 호황에 기대 경제 성장률을 올리고 복지에 막대한 재정을 돌릴 수 있었다. 그 성과는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운 것이었지만, 2008년 세계경제 위기가 라틴아메리카를 타격한 이후 상황이 변했다.

계급적 선택이 필요한 상황에서, 모랄레스 정부는 볼리비아 도시·농촌의 노동자들이 [경제 위기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결정했다. 모랄레스 정부는 경제의 ‘볼리비아화(化)’를 도모하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군의 신흥 자본가들이 저임금 노동력에 기대 자신들

고유의 이해관계를 추구하곤 했다.

볼리비아 [경제]의 성장 모델은 여전히 농산물 가공업과 석유·천연가스·광물의 채광·수출에 기대고 있다. 이 때문에 산업 다각화 시도는 어렵고, 이윤이 아닌 필요 중심의 생산을 지향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 성장 모델은 외국의 투자와 외채를 재원으로 삼고 있다. 환경 측면에서 이는 해양성인데, [모랄레스 정부 시절] 볼리비아 내 아마존 우림을 530만 헥타르나 불태워 축산업을 위한 목초지를 만들고 수출용 농업 부지를 만든 것이 그 생생한 증거다.

모랄레스 정부를 비판하는 것과는 별개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쿠데타에 맞서, 그리고 쿠데타의 배후 세력이자 [새로 들어섬] 우파 정부 하에서 득을 볼 자본가들과 권력자들에 맞서 아래로부터 단결 투쟁을 벌이는 것이다. 볼리비아 수도 인근 원주민 도시 엘 알토 일대의 지역빈민 운동(FEJUVE)을 비롯한 몇몇 사회운동 세력들은 대중을 동원해 쿠데타에 맞서 단호하게 싸우고 있다. 이들이 전부 모랄레스나 그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 아닌 데도 말이다.

볼리비아의 사회운동이 대중을 동원할 능력은 약해졌고 개중에는 모랄레스 정부가 경찰력을 동원해 공격하고 지도자를 수감하는 등 탄압에 시달렸던 경우도 있다.

볼리비아의 사회운동은 2000년대 초보다 취약해졌지만 저항을 조직할 잠재력이 여전히 크다. 모랄레스 정부 하에서 유엔 주재 대사를 지냈지만 지금은 모랄레스 반대파로서 좌파적 원주민 운동을 하는 파블로 솔론 로메로는 이렇게 지적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에서 배워 이전과는 다른 운동을 재건해야 합니다. 자치와 자기 조직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회운동과 새로운 주체 세력을 뿌리부터 재건해야 합니다.”

상황이 복잡하지만, 사회주의자들은 현실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 지금 당장 우파에 맞서는 데서도, 향후 전투에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지난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019년 12월호 번역 김준효

※ 전문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중국 주도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 RCEP

“사회주의”와 무관한 친기업적 신자유주의 협정

이정구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객원교수

11월 4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3차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다. RCEP 제3차 정상회의는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서명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가해 몇 년째 논의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간 FTA다.

RCEP은 세계 인구의 절반(36억 명)을 포괄하고, 참가국 국내총생산(GDP)의 총합은 27조 달러(세계 전체 대비 32퍼센트)에 이른다. 그 교역량은 13조 4000억 달러(세계 전체 대비 27퍼센트)에 이르는 그야말로 초대형 FTA다.

특히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중국은 RCEP 논의를 주도하며, 이를 체결해 동남아 국가들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어 한다. 역내 소비보다 수출을 위한 중간재 생산을 많이 하는 동아시아 국가의 지배자들도 RCEP을 지지한다.

초착취 허용

그러나 다른 FTA와 마찬가지로 RCEP도 단지 자유무역에 관한 게 아니라 자본 자유화와 친기업적 환경 조성을 위한 협정이다.

RCEP은 상품과 서비스 교역은 물론 지적재산권, 경쟁, 전자상거래, 위생·검역, 기술장벽, 분쟁해결 등 통상의 전 분야를 망라할 뿐 아니라 전자상거래나 지적재산권 등에서는 최근의



착취 정신으로 뭉친 세계 지배자들 중국은 미국 중심 질서의 진보적 대안이 아니라, 미국과 자본주의적으로 경쟁할 뿐이다

무역환경을 반영한 최신의 무역규범을 포함한다. 기존의 FTA보다 더 강력한 자본 자유화 요소를 갖췄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한·아세안 FTA에는 없었던 지적재산권 조항이 RCEP에는 들어가 있다.

따라서 RCEP도 체결 당사국들의 노동계급에게 해악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른바 최혜국 조항으로 알려진 투자의 원활화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은 RCEP에 참가한 국가들에서 최악의 노동조건이 기준이 될 것이다. 산업안전 관련 조항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좀 더 엄격하게 보장하는 국가는 다른 국가보다 투자자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규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환경 규제도 가장 허술한 국가의

기준이 FTA의 기준이 될 공산이 크다. 이것을 두고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단체들은 ‘뱀파이어 효과’라고 불렀다.

예를 들어,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 메콩강 개발에 참가하는 한국 대기업들이 환경을 파괴하거나 아동노동을 고용하거나 초착취 공장을 운영해도 처벌을 받지 않고 이윤을 추구할 권리

를 향유하게 된다.

이런 사정은 다른 국가의 자본가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즉 RCEP은 국적을 불문하고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협정이다.

이런 협정을 주도하는 중국을 두고 “사회주의” 운운하는 것은 정말이지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동아시아 제국주의 경쟁

2017년 1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를 선언할 때까지 RCEP은 미국 제국주의에 맞서는 ‘사회주의적’(또는 진보적) 국제무역 질서로 언급되곤 했다. 이제 TPP가 무력해진 상황에서 RCEP이 친기업적인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는 본질이 좀 더 선명하게 부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진영논리의 소재는 남아 있다. RCEP 제3차 정상회의가 끝나자, 미국 국무부는 인도-태평양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보고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설명하고, 호주, 일본, 한국 등을 협력 국가로 언급하며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조했다. 다음 날 시진핑은 상하이에서 열린 제2차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서 중국은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며 국제협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런 신경전은 노동계급의 이해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제국주의 국가 간 패권 경쟁일 뿐이다.

한편, 인도도 이 협정에 서명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인도 총리 모디는 RCEP 체결로 저가의 중국 제품이

인도로 물려와 무역수지 적자가 대폭 늘어날 것을 우려한다. 인도의 관방 싱크탱크인 인도개조국가연구원은 “인도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무역협정에 서명하면 이들 국가뿐 아니라 이 지역과의 무역적자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도가 RCEP 협정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일본도 서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12월 5일자 <환구시보>의 보도를 보면, 11월 29일 일본 경제산업성 차관 마키하라 히데키는 “일본은 인도가 없는 상황에서 RCEP에 대한 서명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중국은 RCEP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보면 2020년에 RCEP이 체결되리라고 장담하는 것은 이른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 미국뿐 아니라 일본, 인도 사이에도 제국주의적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동아시아가 세계 자본주의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산업 생산이 활발한 지역이다 보니 이윤을 두고 치열한 경쟁과 갈등이 생겨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

문재인과 대다수 한국 언론들은 “RCEP 타결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이 시작됐다”고 강조했지만 사실 타결된 것이 아니다. 한국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의 왜곡 보도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받아쓰기’했다.

문재인 정부는 처음에는 “RCEP 타결”이라고 했다가 남희섭 변리사가 외신 보도를 근거로 정부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하자 “협정문 타결”이라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이 말도 사실 왜곡이기는 마찬가지다. 조약이 타결되면 협정문이 나오는데, 협정문은 타결되고 협상은 타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완전한 이율배반이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도 공식적으로 RCEP 타결은 물론이거니와 협정문 타결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결국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유명히는 “RCEP 참여국들이 잔여협상 마무리 후 협정문 법률 검토를 거쳐 내년 정식 서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전히 협상이 남아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가 RCEP 협상에 큰 기대를 걸며 띄우는 것은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한국 경제가 입을



12월 5일 RCEP을 통해 무역 시장 다변화를 이뤘다며 자화자찬한 문재인

타격을 만회하고, ‘신남방정책’을 자신의 치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수출·수입에서 아세안 10개국에 대한 수출과 수입 비중은 각각 2위(16.55퍼센트)와 3위(11.14퍼센트)를 차지한다. 특히 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은 중국과 인도와 더불어 최근 생산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의 대다수 재벌들은 RCEP 협상 체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앞서 봤듯이, RCEP이 2020년에 타결된다는 보장도 없다. 중국과 인도, 일본 등의 갈등이 압초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타결되지도 않은 무역협상에 대해 “타결됐다”고 설레발치는 것을 보면 신남방외교에서의 치적이 필요할 만큼 국내의 사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절박함이 묻어나는 것 같다.

용어설명

신남방정책

아세안, 인도 등 신남방 국가들과 경제·정치적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

홍콩 항쟁

이 운동을 예단하지 말고

지지·연대해서 전진하도록 해야 한다

이원웅

12월 8일 홍콩에서 수많은 인파가 거리로 나와 집회와 행진을 했다. 주최 측은 참가자가 80만 명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구의회 선거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항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항쟁을 촉발한 것은 송환법 개정안이었지만 항쟁의 요구는 더 확대됐다. 캐리 램 행정부가 결국 송환법을 폐기한 후에도 홍콩 대중은 나머지 요구(시위대가 “폭도”라는 규정 철회, 체포 시위자 사면, 독립적인 경찰 폭력 조사 기구, 진정한 보통선거)를 관철시키기 위해 계속 싸우고 있다.

시위대는 “5대 요구, 하나도 빼먹지 마라”, “경찰 즉각 해체” 등의 구호를 외쳤다.

물론 캐리 램 홍콩 정부와 시진핑 중앙정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이날 시위 후에도 캐리 램은 항쟁의 요구가 “법치에 어긋난다.” “행정장관 권한 밖의 일이다” 하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홍콩 대중도 물러서지 않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12월 8일 시위 다음 날 홍콩 전역에서 파업을 일으키자는 호소도 있었다. 이 시도는 결국 불발로 끝났다. 그러나 이런 시도를 더 만만찮게 추진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노동조합을 결성해 일터에 기반한 행동과 조직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홍콩에서 본토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단체인 ‘중국노동회보’는 12월 8일



80만 명이 결집한 12월 8일 홍콩 시위 좌파들은 이런 반란이 주는 영감과 사태에 영향을 미칠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

홍콩 시위 소식을 전하면서, 노동조합을 결성해 파업을 벌이자고 호소하는 포스터와 현수막이 늘어났다고 전했다. 홍콩노총(HKCTU) 지도자인 명슈 탕은 최근 30여 곳이 넘는 신생 노동조합이 홍콩노총에 지원을 요청했다고 <홍콩 프리 프레스>에 말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각종 부문별 노동조합으로 결집할 것을 호소하는 유인물을 반포했다. 아직 노동조합이 없지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온라인 그룹 채팅방도 부문별로 우후죽순 생겼다. 이런 그룹들은 각각 등록자가 수천 명에 이른다.

홍콩 항쟁이 전진하려면 이런 움직임이 더욱 발전해야 한다. 파업은 노동계급 고유의 효과적인 무기다. 그 과정

에서 홍콩 운동은 사회·경제적 요구로 요구를 확대할 수 있다.

한국의 진보·좌파들도 홍콩 항쟁에 지지와 연대를 나타내며 항쟁이 전진하고 발전하기를 바라야 한다.

홍콩 항쟁을 지지하는 한국의 좌파 단체나 노동조합이 하나둘씩 늘어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운동에 이리저리한 약점이 있다면서 지지를 꺼리는 쪽도 여전히 많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본질적으로 수동적이고 기회주의적인 태도다. 모든 진정한 대중 운동에는 늘 이질적인 요소들이 모순되게 뒤섞여 있기 마련이다. 그런 이질성을 보며 지지를 유보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좌파와 노동운동이 성장하고 운동에 영향을 끼치도록 고무해야 한다. 이는 운동 자체를 지지하지 않고서

는 불가능하다.

(혁명적) 좌파가 대중 운동에 개입해 운동의 진보를 촉진한 사례가 프랑스에서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노란 조끼 운동이다.

2018년 말 유류세 인상이 촉발한 노란 조끼 운동은 초기에 극우파가 운동을 이끈다는 (과장된) 비난을 계속 받았다. 처음에 프랑스의 주요 노동조합 지도부들과 일부 좌파들은 노란 조끼 운동에 거리를 뒀다. 노란 조끼 운동도 기성 정당과 함께 노동조합에도 거리를 두려 했다.

그러나 운동 내에 극우가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운동은 분명히 프랑스 사회 내 빈곤, 불평등, 엘리트의 오만함에 항의하는 운동이었다.

노동조합의 대부분 조합원들은 지도부와 달리 노란 조끼 운동과 연계를 맺었고, 프랑스의 일부 혁명적 사회주의자들도 운동에 적극 개입했다. 운동 내에서 극우적 요소들을 속아 내는 의식적 시도도 있었다. 투쟁 과정에서 사람들의 의식이 성장한 효과이기도 했다.

최근, 연금 개악에 맞서 프랑스에서 대규모 파업이 벌어지고 있다. 노란 조끼 운동은 그 파업을 지지하고 있다. 노란 조끼 운동의 진보 자체가 이런 대규모 파업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홍콩 항쟁 안에도 모순되게 여러 이질적인 세력과 정치적 경향이 존재한다. 운동 내에는 지극히 온건하고 친서방적 인사들도 있고, 시진핑 정부의 강경한 탄압에 절망한 나머지 중국 본토 대중과의 연대를 배제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민주적으로 결정된 홍콩 항쟁의 공식 요구에는 그런 주장들이 없다. 홍콩 항쟁의 요구는 모두 지지할 만한 것들이다. 구속 시위대 석방, 민의를 외면하는 통치자의 퇴진 등은 한국에서 제기됐더라면 많은 진보·좌파들이 주저 없이 지지했을 요구들이다. 무엇보다도 이 항쟁의 배경에는 홍콩 사회의 극심한 불평등과 빈곤에 대한 절망과 정당한 분노가 깔려 있다. 이런 점에서 홍콩 항쟁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항과 궤를 같이한다.

앞으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질 대중 운동은 많은 경우 의식이 뒤죽박죽이고 못지않게 모순될 수 있다. 좌파가 관조적 태도를 취하다가 이런 반란이 주는 영감과, 사태에 영향을 미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스페인 마드리드 유엔기후변화회의(COP25)

50만 명이 기후 시위를 벌이다

세계 지배자들이 유엔기후변화회의(COP25)를 위해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 모였다. 이 회의는 원래 칠레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칠레를 휩쓴 대규모 항쟁에 밀려 마드리드로 옮겨졌다.

사라 베이츠는 기후 변화를 멈출 근본적 변화의 희망은 회의장 밖에 모인 수십만 시위대에 있다고 주장한다.

마드리드의 거리는 유엔기후변화회의(COP25) 회담장 앞에서 수많은 기후 활동가들이 시위를 벌이는 저항의 현장이 됐다.

12월 6일 약 50만 명이 마드리드 거리를 메우고 세계 정상들이 기후 비상사태에 제대로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시위는 [기후변화 반대 국제 공동] 학생들의 결석 운동의 일환으로 유엔기후변화회의의 일정에 맞춰 회의장 인근에서 열렸다.

기후변화 운동의 상징 그레타 툰베

리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요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지난주 열린 회의에 참여했다. 툰베리는 활동가들에게 이렇게 연설했다. “권력자들은 아직도 기후 위기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권력자들이 조금이라도 조치를 취한다면 참 좋을 겁니다.

“기후·환경 비상사태로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 갑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유엔기후변화회의에는 200여 개국에서 약 2만 5000명의 공직자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릴 다음 회의가 매우 중요하다. 2020년이 되면 파리 기후변화협약(파리 협약)이 정한 기온 상승 제한 조처 [이른바 ‘신(新)기후체제’]가 발효된다.

12월 9일 ‘멸종 반란’ 활동가들과 ‘밍가’(유엔기후회의에 대항하는 원주민

들의 대안적 연대체) 활동가들이 유엔기후변화회의의 회의장 앞에서 봉쇄 시위를 벌였다.

사람들은 “세계에서 생물종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아마존 우림을 수호하는 원주민들을 위해 기후 정의를 즉각 실현하라고 요구하며 연대의 뜻으로” 노란 보트에 몸을 묶고 시위를 벌였다.

원주민

12월 7일 수백 명이 마드리드 도심 상업 지구를 봉쇄했다. 멸종 반란이 조직한 활동가들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환기하고자 비지스의 노래를 틀고 춤을 췄다.

한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다. “정상적이고 안전한 방법은 다 써 봤습니다. 청원도 하고, 행진도 하고, 정치인들에게 편지도 써봤어요. 그러니 이제 남은 건 시민 불복종밖에 없습니다.”

우간다에서 온 환경운동가 바네사

나카테는 툰베리와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발언했다. “사람들이 죽어 갑니다. 사람들이 집을 잃고, 아이들이 고아가 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의 결과로 이미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눈앞의 문제입니다.”

툰베리는 진정한 변화를 위한 투쟁을 이어 가자고 촉구했다. “민주주의는 선거하는 날뿐 아니라 언제나 계속돼야 합니다.

“예컨대 당장 스웨덴인들이 모두 ‘참을 만큼 참았다’면서 시위하기 시작하면 정부는 쉽게 무너질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다 해도 정부는 민중의 뜻을 받아들여 자신들의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을 겁니다.”

2010년대의 마지막 해인 2019년은 모든 면에서 가장 뜨거운 해였을 것이다.

툰베리가 옳다. 정치인들은 소심한 합의안이나 내놓을 것이다. 그들을 기

다릴 수 없다. 그러기엔 너무 늦었다.

지구를 위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 시급히 급진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것은 대중 운동으로 가능할 것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684호 / 번역 김준호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12월 12일 영국 총선: 노동당 제러미 코빈의 도전

★ 이라크·이란·레바논: 저항이 다시금 중동 정치의 주요 변수가 되다

★ 알제리 총파업: 퇴진한 독재 정권의 복귀 시도에 맞서다

프랑스 연금 개악 반대 대파업

1995년 이후 최대 규모 투쟁

찰리 킴버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연금 개악에 맞선 노동자들의 저항이 분출하면서, 12월 5일 대규모 파업이 프랑스를 휩쓸었다.

철도 등 몇몇 부문 노동자들은 5일 이후에도 파업을 지속했다. 이 기사를 쓰는 12월 9일 현재 대규모 공동 파업과 시위가 프랑스를 수놓고 있다.

노동자들의 이번 대규모 행동은 지속적인 파상 파업으로 우파 정부의 연금 공격을 꺾었던 1995년 이래로 가장 중요한 저항이 될 것이다. 파업 첫날인 12월 5일 시위의 규모는 1995년 투쟁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보다도 더 컸다.

연금 문제가 중심에 놓여 있지만 이 파업은 사회 전반에 퍼진 훨씬 더 광범한 고통을 대표하는 초점 구실을 하고 있다.

파리에서 행진하던 철도 기관사 피에르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전 파업들은 파업하는 시늉만 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파업은 매우 훌륭합니다.

“저는 20년 전 국영 철도공사(SNCF)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50세에도 은퇴할 수 있었습니 다. 하지만 우리는 [정부의] 계속된 공격에 직면했습니다.”

한 교사는 이렇게 말했다. “연금 개



12월 10일, 연금 개악에 맞서 파업 중인 '노동자의 힘' 소속 통신 노동자들

악은 우리에게 매우 커다란 타격입니다. 매달 수백 유로수십만 원의 연금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40년 넘게 일했습니다.

수많은 도시의 병원 노동자들도 파업에 들어갔다. 또한 20개 지역의 우체국 노동자들도 노동조건 변화 문제

로 국영 우체국에 맞서 파업에 돌입했다.

민간 기업의 많은 부문 노동자들도 파업에 동참했다.

파리에서는 시위대를 저지하기 위해 경찰 6000명이 배치됐으며, 파리·낭트·보르도·렌에서는 경찰이 시위대를 공격했다.

하루 파업이 아니라 계속되는 파업

이번 파업은 12월 5일 하루로 끝나지 않았다. 여러 부문의 노동자들은 매일 모여 파업 지속 여부를 투표로 결정한다.

곳곳에서 노동자들은 파업을 이어갈 것을 의논하고 결정하고 있다.

예컨대, [파업 첫날] 항구 도시 르아브르에서 노동자 200명 규모의 총회가 열려 수많은 부문의 파업 노동자들이 한데 모였다.

[극좌파 단체인] ‘레볼루션 페르마농[연속혁명]’ 웹사이트를 보면 교육 노동자, 항만 노동자, 금속 산업과 석유 화학 노동자, 공공 서비스를 담당하는 여러 부문 노동자, 콜센터 노동자, 그리고 노란 조끼 시위대 일부와 학생들이 참가했다.

노동총동맹, 연대·단결·민주노조, 프랑스 중등 교원 노조(FSU), ‘노동자의 힘(FO)’ 조합원들과 프랑스대

학생연합(UNEF)뿐 아니라, 많은 미조직 노동자들도 총회에 참가했다.

이 총회에서는 투표를 통해 파업을 지속하며 도로를 봉쇄하기로 결정했다. [현장 조합원들이] 파업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런 집회가 모든 곳에 필요하다.

이는 현장조합원들의 주도력을 키우고 노동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한다.

1995년 투쟁처럼, 그때보다 더 잘 싸우자

1995년 프랑스 노동자들은 우파 총리 알랭 쥐페의 대대적인 연금·복지 삭감 공격에 맞섰다.

10월 10일 인상적인 공공부문 하루 파업이 벌어졌고, 약 50만 명이 거리를 휩쓸었다.

노동조합 지도부는 투쟁을 이어가기를 주저했다. 많은 사람들은 노동자들이 하루 멋지게 싸웠지만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시위가 새롭게 벌어지고, 10월 10일과 같은 규모는 아니지만 [개악에 맞선] 노동자 시위도 계속됐다.

결국 노동조합 지도부는 압력에 밀려 11월 24일 더 많은 파업과 시위를 벌여야 했다. 호응이 엄청났

다. 80만 명이 행진에 나섰을 뿐 아니라, 특히 심각한 공격을 받던 철도 부문은 활동가들이 탄탄하게 조직돼 있었고 전면 파업을 조직했다.

며칠 후 철도 파업은 파리 시내 버스·지하철로 확산됐고, 이후 우편·가스·전기·통신 부문 소수 노조들도 파업에 동참했다. 각 부문의 파업 노동자들은 매일 대중 집회를 열어 투쟁이 지속되게 했으며, 파업 노동자들은 부문을 뛰어넘어 지역 단위 집회로 모이기 시작했다.

12월 초 정부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학생들에게 대폭 양보했는데, 이는 오히려 저항의 불길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었다. 우편·가

스·전기·통신 파업이 확대됐다.

12월 7일 프랑스 전역에서 130만 명이 행진을 벌였다. 수많은 도시들에서 1936년 대파업 이래로 최대 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그동안 내내 철도·버스·지하철·우체국 등에서 무기한 파업이 지속됐다. 정부는 먼저 철도 노동자들에게 양보했으며, 이후 다른 부문에까지 양보를 거듭하다, 결국 개악안의 핵심 요소를 다 철회했다.

파업이 계속됐다면 총리가 퇴진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노동조합 지도부는 파업을 중단했다. 노동자들은 승리를 거뒀지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었다.

연금 개악에 나선 마크롱

프랑스의 일부 노동자들은 62세에도 은퇴할 수 있고, 연금의 소득 보장 비율도 높은 편이다.

이런 제도의 효과 중 하나는 프랑스의 노인 빈곤율이 인근 영국의 3분의 1이라는 점이다. 철도 노동자와 같은 몇몇 부문은 투쟁으로 더 좋은 조건을 따내기도 했다.

집권 정부들마다 연금 제도를 야금야금 악화시켰지만, 근본적 개악을 단행하지는 못했다. 마크롱은 다른 신자유주의자들이 실패한 연금 개악을 성공시키려 버르고 있다.

마크롱의 계획에 따르면 연금을 전액 수령하기 위해선 모든 노동자들이 최소 64세까지 일을 해야 한다. 마크

롱은 [직종별 차이가 있는] 특별 연금 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모든 노동자들에 적용되는 단일 연금 제도를 만들려 한다.

사람들은 [입사부터 퇴직까지의] 총 노동시간에 따라 “점수”가 집계된다 [소위 ‘점수제 연금 개악’]. 하지만 그 점수의 가치는 차후에 바뀔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연금은 삭감될 것이다.

게다가 마크롱은 입사부터 퇴사까지 받은 임금의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연금 지급액을 산정하도록 개악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일은 더 오래 하지만 연금은 더 적게 받게 된다.

프랑스의 일부 노동자들은 62세에도 은퇴할 수 있고, 연금의 소득 보장 비율도 높은 편이다.

이런 제도의 효과 중 하나는 프랑스의 노인 빈곤율이 인근 영국의 3분의 1이라는 점이다. 철도 노동자와 같은 몇몇 부문은 투쟁으로 더 좋은 조건을 따내기도 했다.

집권 정부들마다 연금 제도를 야금야금 악화시켰지만, 근본적 개악을 단행하지는 못했다. 마크롱은 다른 신자유주의자들이 실패한 연금 개악을 성공시키려 버르고 있다.

마크롱의 계획에 따르면 연금을 전액 수령하기 위해선 모든 노동자들이 최소 64세까지 일을 해야 한다. 마크

롱은 [직종별 차이가 있는] 특별 연금 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모든 노동자들에 적용되는 단일 연금 제도를 만들려 한다.

사람들은 [입사부터 퇴직까지의] 총 노동시간에 따라 “점수”가 집계된다 [소위 ‘점수제 연금 개악’]. 하지만 그 점수의 가치는 차후에 바뀔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연금은 삭감될 것이다.

게다가 마크롱은 입사부터 퇴사까지 받은 임금의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연금 지급액을 산정하도록 개악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일은 더 오래 하지만 연금은 더 적게 받게 된다.

프랑스의 일부 노동자들은 62세에도 은퇴할 수 있고, 연금의 소득 보장 비율도 높은 편이다.

이런 제도의 효과 중 하나는 프랑스의 노인 빈곤율이 인근 영국의 3분의 1이라는 점이다. 철도 노동자와 같은 몇몇 부문은 투쟁으로 더 좋은 조건을 따내기도 했다.

집권 정부들마다 연금 제도를 야금야금 악화시켰지만, 근본적 개악을 단행하지는 못했다. 마크롱은 다른 신자유주의자들이 실패한 연금 개악을 성공시키려 버르고 있다.

마크롱의 계획에 따르면 연금을 전액 수령하기 위해선 모든 노동자들이 최소 64세까지 일을 해야 한다. 마크

롱은 [직종별 차이가 있는] 특별 연금 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모든 노동자들에 적용되는 단일 연금 제도를 만들려 한다.

사람들은 [입사부터 퇴직까지의] 총 노동시간에 따라 “점수”가 집계된다 [소위 ‘점수제 연금 개악’]. 하지만 그 점수의 가치는 차후에 바뀔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연금은 삭감될 것이다.

게다가 마크롱은 입사부터 퇴사까지 받은 임금의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연금 지급액을 산정하도록 개악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일은 더 오래 하지만 연금은 더 적게 받게 된다.

프랑스의 일부 노동자들은 62세에도 은퇴할 수 있고, 연금의 소득 보장 비율도 높은 편이다.

이런 제도의 효과 중 하나는 프랑스의 노인 빈곤율이 인근 영국의 3분의 1이라는 점이다. 철도 노동자와 같은 몇몇 부문은 투쟁으로 더 좋은 조건을 따내기도 했다.

집권 정부들마다 연금 제도를 야금야금 악화시켰지만, 근본적 개악을 단행하지는 못했다. 마크롱은 다른 신자유주의자들이 실패한 연금 개악을 성공시키려 버르고 있다.

마크롱의 계획에 따르면 연금을 전액 수령하기 위해선 모든 노동자들이 최소 64세까지 일을 해야 한다. 마크

롱은 [직종별 차이가 있는] 특별 연금 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모든 노동자들에 적용되는 단일 연금 제도를 만들려 한다.

사람들은 [입사부터 퇴직까지의] 총 노동시간에 따라 “점수”가 집계된다 [소위 ‘점수제 연금 개악’]. 하지만 그 점수의 가치는 차후에 바뀔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연금은 삭감될 것이다.

게다가 마크롱은 입사부터 퇴사까지 받은 임금의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연금 지급액을 산정하도록 개악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일은 더 오래 하지만 연금은 더 적게 받게 된다.

프랑스의 일부 노동자들은 62세에도 은퇴할 수 있고, 연금의 소득 보장 비율도 높은 편이다.

이런 제도의 효과 중 하나는 프랑스의 노인 빈곤율이 인근 영국의 3분의 1이라는 점이다. 철도 노동자와 같은 몇몇 부문은 투쟁으로 더 좋은 조건을 따내기도 했다.

집권 정부들마다 연금 제도를 야금야금 악화시켰지만, 근본적 개악을 단행하지는 못했다. 마크롱은 다른 신자유주의자들이 실패한 연금 개악을 성공시키려 버르고 있다.

마크롱의 계획에 따르면 연금을 전액 수령하기 위해선 모든 노동자들이 최소 64세까지 일을 해야 한다. 마크

롱은 [직종별 차이가 있는] 특별 연금 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모든 노동자들에 적용되는 단일 연금 제도를 만들려 한다.

사람들은 [입사부터 퇴직까지의] 총 노동시간에 따라 “점수”가 집계된다 [소위 ‘점수제 연금 개악’]. 하지만 그 점수의 가치는 차후에 바뀔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연금은 삭감될 것이다.

게다가 마크롱은 입사부터 퇴사까지 받은 임금의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연금 지급액을 산정하도록 개악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일은 더 오래 하지만 연금은 더 적게 받게 된다.

프랑스의 일부 노동자들은 62세에도 은퇴할 수 있고, 연금의 소득 보장 비율도 높은 편이다.

이런 제도의 효과 중 하나는 프랑스의 노인 빈곤율이 인근 영국의 3분의 1이라는 점이다. 철도 노동자와 같은 몇몇 부문은 투쟁으로 더 좋은 조건을 따내기도 했다.

집권 정부들마다 연금 제도를 야금야금 악화시켰지만, 근본적 개악을 단행하지는 못했다. 마크롱은 다른 신자유주의자들이 실패한 연금 개악을 성공시키려 버르고 있다.

마크롱의 계획에 따르면 연금을 전액 수령하기 위해선 모든 노동자들이 최소 64세까지 일을 해야 한다. 마크

롱은 [직종별 차이가 있는] 특별 연금 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모든 노동자들에 적용되는 단일 연금 제도를 만들려 한다.

사람들은 [입사부터 퇴직까지의] 총 노동시간에 따라 “점수”가 집계된다 [소위 ‘점수제 연금 개악’]. 하지만 그 점수의 가치는 차후에 바뀔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연금은 삭감될 것이다.

게다가 마크롱은 입사부터 퇴사까지 받은 임금의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연금 지급액을 산정하도록 개악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일은 더 오래 하지만 연금은 더 적게 받게 된다.

프랑스의 일부 노동자들은 62세에도 은퇴할 수 있고, 연금의 소득 보장 비율도 높은 편이다.

이런 제도의 효과 중 하나는 프랑스의 노인 빈곤율이 인근 영국의 3분의 1이라는 점이다. 철도 노동자와 같은 몇몇 부문은 투쟁으로 더 좋은 조건을 따내기도 했다.

집권 정부들마다 연금 제도를 야금야금 악화시켰지만, 근본적 개악을 단행하지는 못했다. 마크롱은 다른 신자유주의자들이 실패한 연금 개악을 성공시키려 버르고 있다.

마크롱의 계획에 따르면 연금을 전액 수령하기 위해선 모든 노동자들이 최소 64세까지 일을 해야 한다. 마크

롱은 [직종별 차이가 있는] 특별 연금 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모든 노동자들에 적용되는 단일 연금 제도를 만들려 한다.

사람들은 [입사부터 퇴직까지의] 총 노동시간에 따라 “점수”가 집계된다 [소위 ‘점수제 연금 개악’]. 하지만 그 점수의 가치는 차후에 바뀔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연금은 삭감될 것이다.

게다가 마크롱은 입사부터 퇴사까지 받은 임금의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연금 지급액을 산정하도록 개악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일은 더 오래 하지만 연금은 더 적게 받게 된다.

프랑스의 일부 노동자들은 62세에도 은퇴할 수 있고, 연금의 소득 보장 비율도 높은 편이다.

이런 제도의 효과 중 하나는 프랑스의 노인 빈곤율이 인근 영국의 3분의 1이라는 점이다. 철도 노동자와 같은 몇몇 부문은 투쟁으로 더 좋은 조건을 따내기도 했다.

집권 정부들마다 연금 제도를 야금야금 악화시켰지만, 근본적 개악을 단행하지는 못했다. 마크롱은 다른 신자유주의자들이 실패한 연금 개악을 성공시키려 버르고 있다.

마크롱의 계획에 따르면 연금을 전액 수령하기 위해선 모든 노동자들이 최소 64세까지 일을 해야 한다. 마크

롱은 [직종별 차이가 있는] 특별 연금 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모든 노동자들에 적용되는 단일 연금 제도를 만들려 한다.

사람들은 [입사부터 퇴직까지의] 총 노동시간에 따라 “점수”가 집계된다 [소위 ‘점수제 연금 개악’]. 하지만 그 점수의 가치는 차후에 바뀔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연금은 삭감될 것이다.

게다가 마크롱은 입사부터 퇴사까지 받은 임금의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연금 지급액을 산정하도록 개악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일은 더 오래 하지만 연금은 더 적게 받게 된다.

프랑스의 일부 노동자들은 62세에도 은퇴할 수 있고, 연금의 소득 보장 비율도 높은 편이다.

이런 제도의 효과 중 하나는 프랑스의 노인 빈곤율이 인근 영국의 3분의 1이라는 점이다. 철도 노동자와 같은 몇몇 부문은 투쟁으로 더 좋은 조건을 따내기도 했다.

집권 정부들마다 연금 제도를 야금야금 악화시켰지만, 근본적 개악을 단행하지는 못했다. 마크롱은 다른 신자유주의자들이 실패한 연금 개악을 성공시키려 버르고 있다.

마크롱의 계획에 따르면 연금을 전액 수령하기 위해선 모든 노동자들이 최소 64세까지 일을 해야 한다. 마크

롱은 [직종별 차이가 있는] 특별 연금 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모든 노동자들에 적용되는 단일 연금 제도를 만들려 한다.

사람들은 [입사부터 퇴직까지의] 총 노동시간에 따라 “점수”가 집계된다 [소위 ‘점수제 연금 개악’]. 하지만 그 점수의 가치는 차후에 바뀔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연금은 삭감될 것이다.

게다가 마크롱은 입사부터 퇴사까지 받은 임금의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연금 지급액을 산정하도록 개악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일은 더 오래 하지만 연금은 더 적게 받게 된다.

프랑스의 일부 노동자들은 62세에도 은퇴할 수 있고, 연금의 소득 보장 비율도 높은 편이다.

이런 제도의 효과 중 하나는 프랑스의 노인 빈곤율이 인근 영국의 3분의 1이라는 점이다. 철도 노동자와 같은 몇몇 부문은 투쟁으로 더 좋은 조건을 따내기도 했다.

집권 정부들마다 연금 제도를 야금야금 악화시켰지만, 근본적 개악을 단행하지는 못했다. 마크롱은 다른 신자유주의자들이 실패한 연금 개악을 성공시키려 버르고 있다.

마크롱의 계획에 따르면 연금을 전액 수령하기 위해선 모든 노동자들이 최소 64세까지 일을 해야 한다. 마크

롱은 [직종별 차이가 있는] 특별 연금 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모든 노동자들에 적용되는 단일 연금 제도를 만들려 한다.

사람들은 [입사부터 퇴직까지의] 총 노동시간에 따라 “점수”가 집계된다 [소위 ‘점수제 연금 개악’]. 하지만 그 점수의 가치는 차후에 바뀔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연금은 삭감될 것이다.

게다가 마크롱은 입사부터 퇴사까지 받은 임금의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연금 지급액을 산정하도록 개악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일은 더 오래 하지만 연금은 더 적게 받게 된다.

프랑스의 일부 노동자들은 62세에도 은퇴할 수 있고, 연금의 소득 보장 비율도 높은 편이다.

이런 제도의 효과 중 하나는 프랑스의 노인 빈곤율이 인근 영국의 3분의 1이라는 점이다. 철도 노동자와 같은 몇몇 부문은 투쟁으로 더 좋은 조건을 따내기도 했다.

집권 정부들마다 연금 제도를 야금야금 악화시켰지만, 근본적 개악을 단행하지는 못했다. 마크롱은 다른 신자유주의자들이 실패한 연금 개악을 성공시키려 버르고 있다.

마크롱의 계획에 따르면 연금을 전액 수령하기 위해선 모든 노동자들이 최소 64세까지 일을 해야 한다. 마크

롱은 [직종별 차이가 있는] 특별 연금 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모든 노동자들에 적용되는 단일 연금 제도를 만들려 한다.

사람들은 [입사부터 퇴직까지의] 총 노동시간에 따라 “점수”가 집계된다 [소위 ‘점수제 연금 개악’]. 하지만 그 점수의 가치는 차후에 바뀔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연금은 삭감될 것이다.

게다가 마크롱은 입사부터 퇴사까지 받은 임금의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연금 지급액을 산정하도록 개악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일은 더 오래 하지만 연금은 더 적게 받게 된다.

프랑스의 일부 노동자들은 62세에도 은퇴할 수 있고, 연금의 소득 보장 비율도 높은 편이다.

이런 제도의 효과 중 하나는 프랑스의 노인 빈곤율이 인근 영국의 3분의 1이라는 점이다. 철도 노동자와 같은 몇몇 부문은 투쟁으로 더 좋은 조건을 따내기도 했다.

집권 정부들마다 연금 제도를 야금야금 악화시켰지만, 근본적 개악을 단행하지는 못했다. 마크롱은 다른 신자유주의자들이 실패한 연금 개악을 성공시키려 버르고 있다.

마크롱의 계획에 따르면 연금을 전액 수령하기 위해선 모든 노동자들이 최소 64세까지 일을 해야 한다. 마크

롱은 [직종별 차이가 있는] 특별 연금 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모든 노동자들에 적용되는 단일 연금 제도를 만들려 한다.

사람들은 [입사부터 퇴직까지의] 총 노동시간에 따라 “점수”가 집계된다 [소위 ‘점수제 연금 개악’]. 하지만 그 점수의 가치는 차후에 바뀔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연금은 삭감될 것이다.

게다가 마크롱은 입사부터 퇴사까지 받은 임금의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연금 지급액을 산정하도록 개악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일은 더 오래 하지만 연금은 더 적게 받게 된다.

프랑스의 일부 노동자들은 62세에도 은퇴할 수 있고, 연금의 소득 보장 비율도 높은 편이다.

이런 제도의 효과 중 하나는 프랑스의 노인 빈곤율이 인근 영국의 3분의 1이라는 점이다. 철도 노동자와 같은 몇몇 부문은 투쟁으로 더 좋은 조건을 따내기도 했다.

집권 정부들마다 연금 제도를 야금야금 악화시켰지만, 근본적 개악을 단행하지는 못했다. 마크롱은 다른 신자유주의자들이 실패한 연금 개악을 성공시키려 버르고 있다.

마크롱의 계획에 따르면 연금을 전액 수령하기 위해선 모든 노동자들이 최소 64세까지 일을 해야 한다. 마크

롱은 [직종별 차이가 있는] 특별 연금 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모든 노동자들에 적용되는 단일 연금 제도를 만들려 한다.

사람들은 [입사부터 퇴직까지의] 총 노동시간에 따라 “점수”가 집계된다 [소위 ‘점수제 연금 개악’]. 하지만 그 점수의 가치는 차후에 바뀔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연금은 삭감될 것이다.

게다가 마크롱은 입사부터 퇴사까지 받은 임금의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연금 지급액을 산정하도록 개악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일은 더 오래 하지만 연금은 더 적게 받게 된다.

프랑스의 일부 노동자들은 62세에도 은퇴할 수 있고, 연금의 소득 보장 비율도 높은 편이다.

이런 제도의 효과 중 하나는 프랑스의 노인 빈곤율이 인근 영국의 3분의 1이라는 점이다. 철도 노동자와 같은 몇몇 부문은 투쟁으로 더 좋은 조건을 따내기도 했다.

집권 정부들마다 연금 제도를 야금야금 악화시켰지만, 근본적 개악을 단행하지는 못했다. 마크롱은 다른 신자유주의자들이 실패한 연금 개악을 성공시키려 버르고 있다.

마크롱의 계획에 따르면 연금을 전액 수령하기 위해선 모든 노동자들이 최소 64세까지 일을 해야 한다. 마크

롱은 [직종별 차이가 있는] 특별 연금 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모든 노동자들에 적용되는 단일 연금 제도를 만들려 한다.

사람들은 [입사부터 퇴직까지의] 총 노동시간에 따라 “점수”가 집계된다 [소위 ‘점수제 연금 개악’]. 하지만 그 점수의 가치는 차후에 바뀔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연금은 삭감될 것이다.

게다가 마크롱은 입사부터 퇴사까지 받은 임금의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연금 지급액을 산정하도록 개악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일은 더 오래 하지만 연금은 더 적게 받게 된다.

프랑스의 일부 노동자들은 62세에도 은퇴할 수 있고, 연금의 소득 보장 비율도 높은 편이다.

이런 제도의 효과 중 하나는 프랑스의 노인 빈곤율이 인근 영국의 3분의 1이라는 점이다. 철도 노동자와 같은 몇몇 부문은 투쟁으로 더 좋은 조건을 따내기도 했다.

집권 정부들마다 연금 제도를 야금야금 악화시켰지만, 근본적 개악을 단행하지는 못했다. 마크롱은 다른 신자유주의자들이 실패한 연금 개악을 성공시키려 버르고 있다.

마크롱의 계획에 따르면 연금을 전액 수령하기 위해선 모든 노동자들이 최소 64세까지 일을 해야 한다. 마크

롱은 [직종별 차이가 있는] 특별 연금 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모든 노동자들에 적용되는 단일 연금 제도를 만들려 한다.

사람들은 [입사부터 퇴직까지의] 총 노동시간에 따라 “점수”가 집계된다 [소위 ‘점수제 연금 개악’]. 하지만 그 점수의 가치는 차후에 바뀔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연금은 삭감될 것이다.

게다가 마크롱은 입사부터 퇴사까지 받은 임금의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연금 지급액을 산정하도록 개악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일은 더 오래 하지만 연금은 더 적게 받게 된다.

프랑스의 일부 노동자들은 62세에도 은퇴할 수 있고, 연금의 소득 보장 비율도 높은 편이다.

이런 제도의 효과 중 하나는 프랑스의 노인 빈곤율이 인근 영국의 3분의 1이라는 점이다. 철도 노동자와 같은 몇몇 부문은 투쟁으로 더 좋은 조건을 따내기도 했다.

집권 정부들마다 연금 제도를 야금야금 악화시켰지만, 근본적 개악을 단행하지는 못했다. 마크롱은 다른 신자유주의자들이 실패한 연금 개악을 성공시키려 버르고 있다.

마크롱의 계획에 따르면 연금을 전액 수령하기 위해선 모든 노동자들이 최소 64세까지 일을 해야 한다. 마크

롱은 [직종별 차이가 있는] 특별 연금 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모든 노동자들에 적용되는 단일 연금 제도를 만들려 한다.

사람들은 [입사부터 퇴직까지의] 총 노동시간에 따라 “점수”가 집계된다 [소위 ‘점수제 연금 개악’]. 하지만 그 점수의 가치는 차후에 바뀔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연금은 삭감될 것이다.

게다가 마크롱은 입사부터 퇴사까지 받은 임금의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연금 지급액을 산정하도록 개악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일은 더 오래 하지만 연금은 더 적게 받게 된다.

프랑스의 일부 노동자들은 62세에도 은퇴할 수 있고, 연금의 소득 보장 비율도 높은 편이다.

이런 제도의 효과 중 하나는 프랑스의 노인 빈곤율이 인근 영국의 3분의 1이라는 점이다. 철도 노동자와 같은 몇몇 부문은 투쟁으로 더 좋은 조건을 따내기도 했다.

집권 정부들마다 연금 제도를 야금야금 악화시켰지만, 근본적 개악을 단행하지는 못했다. 마크롱은 다른 신자유주의자들이 실패한 연금 개악을 성공시키려 버르고 있다.

마크롱의 계획에 따르면 연금을 전액 수령하기 위해선 모든 노동자들이 최소 64세까지 일을 해야 한다. 마크

롱은 [직종별 차이가 있는] 특별 연금 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모든 노동자들에 적용되는 단일 연금 제도를 만들려 한다.

사람들은 [입사부터 퇴직까지의] 총 노동시간에 따라 “점수”가 집계된다 [소위 ‘점수제 연금 개악’]. 하지만 그 점수의 가치는 차후에 바뀔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연금은 삭감될 것이다.

게다가 마크롱은 입사부터 퇴사까지 받은 임금의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연금 지급액을 산정하도록 개악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일은 더 오래 하지만 연금은 더 적게 받게 된다.

프랑스의 일부 노동자들은 62세에도 은퇴할 수 있고, 연금의 소득 보장 비율도 높은 편이다.

이런 제도의 효과 중 하나는 프랑스의 노인 빈곤율이 인근 영국의 3분의 1이라는 점이다. 철도 노동자와 같은 몇몇 부문은 투쟁으로 더 좋은 조건을 따내기도 했다.

집권 정부들마다 연금 제도를 야금야금 악화시켰지만, 근본적 개악을 단행하지는 못했다. 마크롱은 다른 신자유주의자들이 실패한 연금 개악을 성공시키려 버르고 있다.

마크롱의 계획에 따르면 연금을 전액 수령하기 위해선 모든 노동자들이 최소 64세까지 일을 해야 한다. 마크

롱은 [직종별 차이가 있는] 특별 연금 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모든 노동자들에 적용되는 단일 연금 제도를

톨게이트 직접고용 발표, 150명은 또 제외

이강래 사장은 생떼 쓰지 말고 전원 직접고용하라

양효영

12월 10일 도로공사가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톨게이트 노동자 800여 명을 추가로 직접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관련 재판의 1심 승소자와, 계류자 중 2015년 이전 입사자를 합한 수다. 1심 재판 계류자 중 2015년 이후 입사자는 또다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 12월 6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톨게이트 노동자 4000여 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거듭 도로공사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 판결조차 불복하면서 전원 직접고용을 거부한 도로공사가 그저 생떼를 부린 것임을 확인해 줬다.

이처럼 법률적으로 완패하자 도로공사는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1심 승소자(570여 명)와 함께 1심 계류자 중 2015년 이전 입사자(280여 명)를 직접고용하겠다고 했다(이미 자회사로 전환된 3500여 명은 제외).

1심 판결을 받지 않으면 직접고용을 할 수 없었던 10월 9일 을지로위원회 중재안보다는 더 나아간 내용이다. 을지로위원회 중재안을 거부하고 투쟁한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일궈 낸 일부 전진이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 더해 민주당 의원실 17곳에서 추가 농성을 하는 등 끈질기게 투쟁해 왔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여전히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소송을 이어



변변한 이강래 대량해고로 고통 주고, 끝까지 전원 직접고용 거부하더니 총선 출마라니 2019년 11월 30일 민중대회

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래서 약 150명은 직접고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민주일반연맹은 “독소 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015년 이후 입사자

도로공사는 2015년 이후 입사자의 경우 불법파견 요소를 제거했다면서, 재판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12월 6일 법원 판결 결과는

도로공사의 기대와 달랐다. 이번 재판 승소자 중 55명이 2015년 이후 입사자다. 그래서 민주일반연맹은 ‘도로공사가 2015년 이후 입사자와 관련해 변론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이강래 사장은 2015년 이후 입사자들을 직접고용할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임시직으로 고용한 후 소송을 이어가며 이후 최초 판결에 따르겠다고 했다.

이는 명백한 시간끌기다. 이강래는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곧 도로공사 사장을 내려놓기로 한 상태다. 그러니 자기 임기 동안에는 전원 직접고용이 불가하다는 것이고, 그 뒤로는 사장이 바뀌는 등의 이유를 대며 차일피일 재판과 협상을 질질 끌려는 속셈일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런 도로공사 측을 사실상 거들었다. 12월 11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중재한 도로공사-민주일반연맹

교섭에서 을지로위원회는 두 가지 중재안을 냈다. 하나는, 우선 2015년 이후 입사자까지 일단 직접고용한 뒤 이후 판결에 따르자는 것이다. 둘째는 2015년 이후 입사자를 임시직으로 고용한 뒤에 이후 판결에 따르자는 것이다(이강래가 밝힌 입장이 이것과 같다).

그러나 법원에서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주장이 논파된 상황에서 재판과 연동해서 시간을 끌 이유는 없다. 엄동설한에 천막농성과 도로공사 본사 점거를 이어가는 노동자들이 있다. 하루라도 빨리 전원 직접고용해야 한다.

도로공사 측이 직접고용 노동자들을 기존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도 문제다. 그간 도로공사 측은 노동자들이 기존에 해 오던 수납 업무를 자회사로 이관했다면서, 직접고용된 요금수납원들을 줄임써터 화장실 청소, 고속도로 배수로 청소, 잡초 베기 등에 투입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 중 장애인도 많아 해당 업무를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를 강행했다. 그래서 이미 직접고용된 노동자 사이에서도 위험하고 열악한 업무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도로공사가 야비하게 구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방조해 왔다. 오히려 청와대에 책임을 묻는 민주노총 노동자들을 연행하고 폭력까지 썼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이런 정부와 도로공사에 맞서 6개월째 투쟁하고 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전원 직접고용 요구와 투쟁이 옳다.

문재인 정부의 ‘건설 일자리 개선 대책’은

이주노동자에게 고용 악화 책임 떠넘기기

장우성

12월 3일 국회에서 법무부와 한정에 의원(민주당)이 공동주관으로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 고용 방지 토론회”를 열었다. 건설현장의 “외국인 불법 고용”을 근절하기 위해 원청업체의 처벌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11월 말에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일자리 지원 대책’에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주,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방침을 포함시켰다.

정부는 이런 조처가 ‘이주노동자의 건설업 국민 일자리 잠식’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정부는 2017년 말에도 이를 명분으로 건설현장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무려 8516명이 단속됐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이전 3년(2014~2016년, 4221명)보다 2배로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단속에 쫓기던 미안마 출신 건설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자리 부족의 가장 큰 이유는 건설 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건설투자 성장률은 -4.3퍼센트, 내년에는 -2.3퍼센트(한국은행)로 당분간 부진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최근 각종 고용지표에서 건설업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0~11월 동안 무려 12만 개의 일자리가 줄었다.

이는 이주노동자 고용 억제로 내국인의 부족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결코 제대로 된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정부가 내국인 일자리를 걱정하는 척하지만, 정작 일자리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은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건설현장의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다단계 하도급은 여전히 만연하다. 다단계 하도급은 사용자들의 비용과 책임을 줄여 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다단계 하도급을 규제해 장시간 저임금을 개선하면 일자리 질을 개선할 뿐 아니라 일자리 규모도 늘릴 수 있지만 정부는 사용자들의 이유는 침해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건설현장 포괄임금 적용 지침을 폐기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건설현장의 악명 높은 산재 문제 해결도 외면하고 있다. 건설업 사고사망민인율(근로자 1만 명 당 사고사망자 수)은 지난 1년 사이에 12퍼센트가 늘었다.

건설현장 일자리 악화의 원인은 경제 위기와 이윤 추구에 눈이 먼 기업주, 이를 비호하는 정부에 있다.

고용주 처벌의 효과

법무부는 기존 대책에 원청업체 처벌 법제화를 추가하려 하는데, 실제 이런 조처는 사용자들의 ‘불법 고용’을 금지하는 효과보다는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만 더 악화시키는 효과를 내기 십상이다.

흔히 고용주 처벌은 형식적인 벌금 수준에 그치지만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체포와 추방이 늘곤 했다. 가령, 2009년 4월 미국 오바마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색과 체포보다는 불법고용주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이후 4년간 오바마 정부가 추방한 이주노동자 수는 역대 최대 규모였다.

또 고용주 처벌이 강화되면 사용자들은 그 위험부담을 이주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식으로 대처해 더 위험한 노동 조건과 열악한 처우가 강요된다.

사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고용주들을 제대로 제재할 의사도 없다.

최근 법무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3D 업종, 부족한 노동력 보완, 저임금에 따른 생산원가 절감 등의 긍정적 인 측면”이 있다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적정 규모’로 유지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정부가 고용 악화의 책임을 이주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이 위선적이고 속죄양 삼기인 이유다. 이주노동자는 이런 사태에 책임이 있기는커녕 오히려 가장 큰 피해자다.

따라서 위선적인 정부의 책임 전가와 이주노동자 속죄양 삼기에 반대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과 속죄양 삼기 정책이 강화되면 이주노동자들

은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릴 것이고, 이를 통해 다른 노동자들의 조건도 하향 압박이 커질 것이다. 결국 전체 노동자 계급에게 해로운 일이다.

그런 점에서 11월에 발표된 정부의 “건설현장 일자리 지원 대책”에 ‘외국인 불법고용 단속 강화’ 내용이 포함됐음에도 이에 대한 비판없이 건설연맹이 환영 성명을 발표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내년에도 건설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용자들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억누르려는 시도를 더 강화할 것이다.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조합원 고용 기피, 노조 활동 탄압과 같은 공격을 더 강화할 공간이 크다.

이런 사용자들의 공세에 잘 대처하려면, 노동조합이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 개선과 단속에 반대하고 나서야 한다. 그래야 조건의 하향 압박을 막고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강화해 사용자들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노조 내 사회주의자들과 좌파적 활동가들이 이런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친기업 공세에 대한 항의 11월 30일 전국민중대회

김종민 기자

주 52시간제 시행 유예, 특별연장근로 확대

노동시간 단축 열망 또 짓밟는 문재인 정부

박설

문재인 정부가 내년 1월로 예정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을 1년간 유예하고 특별연장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

이번 발표는 이미 1달 전에 예고된 것으로, 국회에서 노동개악 입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그 보완책으로 나왔다. 장시간·저임금 노동체제 유지를 바라는 기업주들의 아우성에 정부가 적극 호응해 노동시간 단축 약속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것이다. 특히 경제적·정치적 위기에 직면한 문재인 정부는 친기업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 전반이 그러하듯,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서도 문재인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해 왔다. 주 52시간제 시행을 거듭 연기하고,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무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인력 충원과 임금 보전 요구를 개무시했다. 그러는 동안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의 고통이 지속됐다.

지난 5월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직장인의 74.4퍼센트가 현재 “과로 상태”라고 응답했다.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은 꿈같은 얘기다. 사용자들이 작업 속도를 높이고 변형근무제를 추진하면서 노동

강도가 높아진 곳들도 다반사다. 주 52시간제 시행을 전후로 월 평균 임금이 적게는 30만~40만 원에서 많게는 70만~80만 원씩 깎였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나온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공염불이 됐다. 한쪽에서는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청년들이 단기 일자리나 실업으로 고통받는 불합리한 현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과로 사회” 조장하는 보완책

그런데도 정부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주 52시간제 시행을 연

기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 상당수의 고통을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주 52시간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30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1500만 명이 넘고 전체 노동자의 85퍼센트가 끼이 된다.

최근 정의당 노동본부의 발표를 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뇌·심혈관 업무상질병 사망자 중 300명 미만 사업장(5인 미만 포함) 비율은 거의 80퍼센트에 이른다. 이들 중 다수가 과로사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또,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되 “경영상 필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11월 30일 전국민중대회

김종민 기자

자연재난 등의 경우에만 한시적·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현행 특별연장근로제도를 개악해 허용 범위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행정조치(시행규칙 개정)로 내년 1월 시행이 가능토록 했다.

이는 사실상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를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시행 시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이 노동시간 연장의 제약 장치가 될 리는 없어 보인다.

실제로 이번엔 제시된 허용 기준은 업무량의 일시적 증가(촉박한 납기일, 대량 리콜, 공기 지연, 마감 압박 업무), 설비·기계 고장, 소재부품산업의 연구개발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상당히 넓다. 특별연장근로 확대가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비판을 의식해 정부는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등 “건강권 보호” 조치를 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방안도 노동자들이 겪을 고통을 진정으로 경감시키지 못한다. 예컨대,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도입하더라도 하루 12시간 이상 초과 노동이 허용된다. 만성과로 인정 기준인 12주 연속

주당 60시간 초과 노동을 규제할 수도 없다. 게다가 “건강권 보호 조치를 지도”하겠다는 수준이어서 기업을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추가 노동개악도 예고

재계는 이번 정부 발표를 반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임시방편식 보완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탄력근로제를 비롯한 유연근로제 확대 법안들을 통과시켜 더 확실하게 개악하라고 촉구했다. 특별연장근로 허용 범위 확대도 거추장스러운 노동부 인가 절차 없이 할 수 있도록 법률로 명시하자고 했다.

문재인 정부도 “행정적 보완조치로는 한계가 있다”며 조속한 입법화를 국회에 당부했다. 12월 11일 시작된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법안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노동자 저항권 제약,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최저임금제도 개악 등 다른 노동개악 법안들도 통과시키려 할 수 있다. 규제 완화와 의료민영화를 담은 데이터 3법도 지속 추진할 것이다. 연말 임시국회에서 추가 개악 처리를 경계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실질적 총파업에 나서야 한다.